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1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2
  - 주택도시기금

(10시42분 개의)

○소위원장 **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통 분야 예산안 소위 심사를 하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시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이 있을 때는 취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들은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의사진행발언.

○**김도읍 위원** 저희들이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한준호** 예, 50건 정도 됩니다.

○**김도읍 위원** 양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도 수용하는 건 생략을 하고, 다 책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불수용 또는 수용곤란 이것만 보고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고 토론도 저희들 그걸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한준호** 예, 오늘 최대한 6시까지 마치 보도록 하고요. 오늘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대로 진행을 하세요.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불수용 또는 수용곤란 부분만 보고를 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토론도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소위원장 한준호** 예, 짧게 보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오늘 안건이 한 50여 건 정도 돼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주택도시기금

(10시45분)

○**소위원장 한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국토교통혁신펀드 사업은 펀드 조성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2번,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

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분담금(ODA) 사업 중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속 가능 모빌리티 구축 지원 사업에 신규 반영분 8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4번,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관사 14채에 대한 임차료 15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기초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먼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정부 측은 4건 다 현재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국토교통혁신펀드의 경우는 지금 금년 11월에 7호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고 향후 출자자 모집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조속히 펀드를 조성해서 적정 규모의 펀드 조성 금액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창업 및 기업 지원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중기부 사업과 좀 차별화됩니다. 중기부 사업은 주로 IT 에너지 바이오 같은 사업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여러 가지 창업보육공간 지원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이건 문체부나 환경부나 다른 타 부처도 중기부 사업과 별도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ESCAP 분담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엑스포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고요. 이건 기존에 UN ESCAP과 추진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 세 곳을 선정했고 엑스포 이후에 금년 2월에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국제기구와의 신뢰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는 저희가 예산 분류를 해서 그러는데 5년간 10배가 증가한 게 아니고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낮은 급여 그리고 현재 관사 보유율이 한 35%밖에 안 됩니다, 원래 행안부의 기준이 70%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이런 걸 반영해서 지방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배려해서 당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손명수 위원 제가 질문 있습니다.

3번, UN ESCAP 분담금 관련해서 이게 피지에 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피지 사모아 통가, 세 군데입니다.

○손명수 위원 태평양 도서국가들인데 그 국가하고 체결된 협약서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ESCAP하고 협약이 있는지 근거가 궁금해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것은 다자 지원이기 때문에 올 24년 4월에 UN ESCAP하고 저희 국토부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 양해각서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걸 자료를 주세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3번, UN ESCAP 분담금은 사업 세부내역을 먼저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하나 질문합니다.

4번 보면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하는데 소속기관은 주로 어느 직원들을 이야기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 1차·2차 소속기관, 즉 지방항공청 지방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

○서범수 위원 각 지방에 내려갔을 때 임차하는 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연고지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비연고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숙소 임차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기준이 70%인데 지금 한 35%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

○서범수 위원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 사실은 서울에 있다가 지방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숙소는 안 주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몰라도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은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더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부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 내에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도권 중심의 사고다. 서울에 근무하다가 지방에 가는 그건 경제적 부담이 별로 안 드는데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들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장 김기용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서울에서도 관사는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국토청 그다음에 수원국토사무소 강화출장소 의정부국토소에 관사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UN ESCAP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릴 자료들 지금 준비 안 됐어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행동 프로그램하고 딱딱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담당자들이 딱 준비해 가지고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준비를 하세요. 언제 하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이게 부산엑스포 관계없이 대상국 선정된 게 올해 2월 아니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금년 2월입니다.

○김도읍 위원 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자료와 부속 서류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때그때 해야지 꼭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야 이제사 준비를 하고 그래요.

차관님, 지금 지시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과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도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면에 보고서 작성하고 뒤에 부속 서류들 증빙 서류들 딱딱 붙여 가지고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혁신펀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7호 펀드 조성 중이라고 했는데 11월인데 언제 끝납니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지금 출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제 끝난다고 장담은 못 하는데 올해 안에는 확실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출자가 돼 있지만 민간하고 같이 6 대 4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되면 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8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내 조성돼 가지고 집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사실은 이 검토의견이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금 조성이 그렇게 해서 한 1년 걸리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4년 동안 투자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블라인드 펀드는 저도 MBC 있을 때 운용을 해 봐서 아는데……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그러니까 올해 금액이 내년 예산에 태워졌다고 해 가지고, 정부는 모태펀드에 바로 집행을 하지만 실집행은 4년 걸쳐서 되고 4년이라면 평균 1년의 실집행률이 한 25% 정도 되면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집행이……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짧게 말씀……

요지는 이렇게 11월 돼서 아직 조성 진행 중이고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데 지금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박연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실무자 의견 주시려는 것 같은데 의견 주세요.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과장입니다.

저희 진행 상황은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후에 3개월 동안에 민간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운용사는 올해 7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3개월 동안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중에 출자자 모집이 완성되고 조성이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GP사도 모집해야 되고 모태펀드의……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운용사는 선정이 됐고요.

○소위원장 한준호 운용사는 선정됐어요?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선정됐습니다. 6월 달에 선정이 됐고 평균적으로 약 3개월 동안 민간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정도에 조성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간 지연이 되는 것은 민간 출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고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자 규모보다 민간 출자자가 더 많이 모여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양해해 주시고, 출자금에 많이 모여서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서 예산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명확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조성이 안 됐냐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저희가 시간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음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3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3페이지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416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와 아울러 아래 쪽에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사업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과 5번, 6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실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행실적 저조로 교부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어 58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25억 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연번 7번과 9번은 보고를 생략하고 연번 8번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인 노후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에 대한 사업비 10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시 시설물

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반환이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을 받은 것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 조성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적정 예산이 임시개방 부지의 활용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연내 고시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조치를 취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2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국가시범도시 부산과 세종인데 부산에 현재 SPC 설립이 지연돼서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11월에 수자원공사가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4번, 서울 강서구 등마루근린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은 이게 지자체의 자치사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에서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5페이지 8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성능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의 수용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0억 증액 중에서 반 정도 50억 정도가 적정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8번은 50억 증액 이야기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은 저희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보류사업으로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질문 있습니다.

4페이지 3번, 조정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포럼 예산으로만 2억 5000만 원 했던데 이게 기존에 하던 포럼인가요, 아니면 새로 뭘 만들자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저희가 새로이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가 지원하고 있는 포럼의 종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조정포럼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이걸 신규로 해서 최근에 조정에 대한……

○김희정 위원 아니요, 국토부가 하고 있는 각종 포럼의 종류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부가 주관해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지금 포럼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수용’ 한 자만 적어 와 가지고 통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정부가 직접 포럼을 개최해야 되는지, 누구를 주최로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들 이외에는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난데없이 신규로 이렇게 사업 넣어서 그냥 ‘수용’ 가지고 오면 수용이 되냐고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김희정 위원 사업 상세히 보고하세요. 보기 전에 보류입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계획안들 같은 것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말씀 중에, 국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포럼들 중에서 조경포럼처럼 국토부가 예산 지원하는 포럼이 있는지 그걸 여쭙보신 건데 거기에 대해……

○김희정 위원 없다고 대답했잖아요.

○정점식 위원 아예 없습니까, 모든 포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포럼 개최 비용이 지금 7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 하면 계속할 거예요? 올해 2025년에만 편성되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일단 신규로 해서 계속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계속 포럼을?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김희정 위원 자료가 뭐가 와야 되냐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안이 현재 여기 없지요. 2번, 제가 첫 질문에 했듯이 국토부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개최하는 포럼의 종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러면 이 포럼을 하게 될 경우에, 다른 포럼이 없을 경우에 이 포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등 하여간 이 사업 제목 말고는 어떤 것도 나와 있는 것 없이 그냥 2억 5000? 보고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이게 2018년도에 세종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선도사업으로 진행됐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부산이 21년 4월 1순위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민간에서 회사가 LG CNS하고 신한하고 현대건설이 참여하는데요. 업체 간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업체 간의 이견이라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21년도 1순위 컨소시엄 포기한 것 그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윤영중 도시경제과장 운영중입니다.

그때 당시 한화에너지 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마지막에 사업에 미참여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그때 결렬이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운영중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이 수익성 또



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그쪽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21년도예요. 그리고 21년도 10월에 다시 2순위 컨소시엄도 협약 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윤 과장님?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김도읍 위원 그것도 동일한 사유지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맞습니다. 그때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 이견이 좀 있었고요. 그쪽에서는 컨소시엄의 연대책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완화되는 것을 요청했고 저희 쪽에서는……

○김도읍 위원 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들어 보세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저희 총사업비가 약 5.6조입니다.

○김도읍 위원 5조 6000억 아닙니까. 맞지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국비가 총 얼마지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국비는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업으로 약 한 700~8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윤 과장님 알고 있지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할 때 1000억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김도읍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게 아니고 1000억을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요. 국가가 지정하는 스마트시티 선도사업이라고 하면서 5조 6000억짜리에 국비 1000억 넣고 생색을 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가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1000억을 가지고 선도사업 지정, 뭐하는 거냐? 그래서 국비 지원액을 대폭 늘려야 된다. 안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기존에 들어갔던 투자비가, 국비가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정부한테 있어요. 전 정부, 지금 현 정부, 정부한테 있다니까요.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겨우겨우 해 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지요, 감액 의견 때문에?

○김도읍 위원 아니, 시작을 한다고요,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님 잘 좀 살펴서 감액 요구를 철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다른 의견들 다 받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SPC 설립 지연 때문에 교부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11월에 민관 사업시행합의서가 체결

되고 또 12월에 SPC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바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정부 측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적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사업 합의서가 체결됐고 12월에 정상적으로, SPC가 국토부 K-water 부산시 이런 여러 가지 컨소시엄과 같이 해서 합의서가 체결됐고 컨소시엄이 SPC가 12월에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예산이 100% 지원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정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답을 똑바로 하셔야지 철회를 하든 말든 하지.

이거 이렇게 하시지요.

똑같이 향후 사업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보류해 놓은 다음에 향후 사업계획을 주시면 제가 보고 이것은 철회를 할지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오전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정부가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제가 잘 감시해서 중간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한준호 김도읍 위원님이 보증까지 서셨으니까, 이거 일단 사업계획을 먼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의견들 좀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만 좀 하면 일단은 용산공원조성 사업하고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보류 사업으로 빼놓고, 그리고 조정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된 내용은 정부 측은 수용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것도 계획안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로 빼놓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억 증액에 대해서 50억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해서 일부 수용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진행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연번 10번, 건축안전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사업이 사업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울러 5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내역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7억 33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울러 2025년 종료가 예상되므로 완료되지 않은 동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28억 8200만 원, 28억 2100만 원, 23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부터 뒤쪽 8페이지 연번 14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정리된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국가기본도 수정 예산이 과다·반복 이월되고 있으므로 359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각각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6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연번 10번, 건축안전입니다.

이 부분은 첫째, 건축자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잔여 사업비 전액을 편성해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잔여 사업비 전액이 20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편성 안 했고 내년 집행 가능한 범위, 즉 15억 정도만 반영했고 내년 15억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일부 감액 논란과 수용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것 중 남아 있는 223동과 또 미신청한 98동을 다 해서 하려면 23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페이지 연번 15번, 국가기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과다·반복 이월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집행액 수준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64억을 감해서 편성했고 최근에 매년 집행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75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자체와 5 대 5 매칭하는 방식인데 신규는 5 대 5로 그대로 가고 기구축된 것을 갱신하는 경우에 100% 국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75억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방금 것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 때문에 전년보다 낮춰서 현재

예산을 담았는데 그다음에 75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것, 이게 둘 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해 감했고 그다음에 이를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아니고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아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은 국가가 100%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인 5 대 5 매칭으로 하게 되면……

○소위원장 한준호 5 대 5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75억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지요. 사업 방식을 바꾸면 75억이 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실무적으로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지금 위원장 묻는 것은 일부는 감액에 대해서 수용곤란하다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또 수용해 달라. 감액에 대해서 수용곤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반복되는 이월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감액된 정부안을 담아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내 말이 맞는지 보세요. 감액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본도 수정 관련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안태준 위원님부터 정준호 위원님까지 다섯 분이 증액 주장한 것은 기본도 수정 중에서도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에 관련된 것을 증액해라 이 말 아니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앞에 것만 설명하면 됩니까? 비목이 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세부사업은 국가기본도 수정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역 중에 1 대 1000이 있고 1 대 5000이 있고, 다른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감액에 대한 원안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전체를 얘기를 한 거였고요. 밑의 증액은 세부사업 중 내역에 대한, 1 대 1000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세부사업으로 반영이 되니까 7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차관님 설명대로 하면 전년보다 깎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또 75억 증액은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제가 여쭙본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10번 항,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플랫폼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희 위원 예,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그런데 24년도에 완료 예정이었던 2차 연도 사업이 올해 8월 기준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이것 완료가 안 되잖아요. 26년이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래서 예산 전체가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23 24 25로 하려고 했다가 출발시간이 늦어져서 결론적으로 24 25 26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전액 다 하면 20억 9000인데 그중에 집행 가능한 15억만 내년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9000만 원은 26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연희 위원 5억 9000만 원은 26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잔여 사업비 15억은 25년도에 쓰고 나머지 5억은 26년도에 쓴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약 6억은 26년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안태준 위원 저도 보시는 중에 이어서 질문하면요, 6페이지 10번입니다.

어차피 문진석·이연희 위원님이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냈고 제가 5억 원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게 수용곤란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보면 저는 감액 의견을 냈는데 아래에는 똑같은 사업에 또 증액 의견 낸 위원님들 의견은 그대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어쨌거나 4년간 평균 집행률이 2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쥐도 못 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또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니까 수용을 딱 했습니다, 보니까. 저는 편성해도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현재 2.9% 집행했어요. 20년에 19%, 21년에 58%, 22년 19%, 23년 8%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사업 대상 건축물 실태파악도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 집행이 됐던 58%를 감안해서 전체 예산의 60% 남기고 삭감 의견을 저는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밑에 위원님들이 똑같은 것에 증액 의견을 내니까 수용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담당하고 있는 건축안전과장 정승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도 말에 충북 제천에서 복합건물 화재가 있었고 18년도 1월 달에 밀양 세종병원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 내장재가 가연성 재질로 해서 화재 확산이 빨랐고 일부 건물들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19년도에 이 지원사업을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장재를 불가연성 재질로 좀 바꿔 주고 스프링클러를 조금 더 보강을 해 주는 사업 내용이고요.

다만 이게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건축주가 1 대 1 대 1로 비용 부담을 하다 보니 실제로 건축주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사실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계속적인 지연이 있어 왔고요.

다만 지난 6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대상 2000여 동 중에 지금 1800동을 완료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남은 223동이 지금 미신청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사실 법에 25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어떻게든 이분들 설득해서 2000여 동 지원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 지연이 반복됐지만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하나만 여쭙보면, 관련 법은 개정이 됐고 지금 관련해서 인명 피해도 꾸준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5년까지 사업이라서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예산이 필요하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이 건 관련해서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김도읍 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3동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종료가 되는데 1년 만에 다 된다고, 정부를 믿고 저도 이 예산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집행률이 25.7, 제일 많이 나올 때가 58% 정도 되잖아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사실 지원대상이 지자체에서 추계를 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중간에 그게 조금 혼선이 있어서 일부 22년도 예산이 좀 과다 편성돼서 불용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올해 실적행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가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 구조상 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완료해서 지원금이 나가기까지 통상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행률이 10%가 안 되지만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 들어왔나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예, 다 들어왔고요.

○서범수 위원 223군데가, 신청이?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아니요.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신청을 했지만 올해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동수가 98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왔지만 내년에 지원해야 될 분들 98동하고 지금 신청이 아예 안 들어온 설득해야 될 분이 223동이 남아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총 동수가 321동인 거고요.

○안태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그런다 치더라도

5년 동안 잘 안 됐는데 마지막이니까 신청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저의 감액 의견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일단 저희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폐업하는 상황도 있고 용도변경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까 숫자가 픽스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지원대상은 2057동으로 저희들이 최종 픽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전화를 하고 찾아뵙고 하지만 좀 더 찾아뵙고 설득을 드리려고 노력을 계속 들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동안 89% 해 온 것 되게 힘들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남은 223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정부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안태준 위원** 저는 어쨌거나 이것 취지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렇게 의지를 밝히고, 위원님 말씀따라나 정부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고맙습니다.

차관님,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의견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건축물의 화재성능 보장을 하는 건데 관련 법에는 노후 숙박시설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지금 현재 여기 예산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그런데 예산에는 항상 빠져 있고. 최근에 부천 호텔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부천 호텔 화재 이후에 관계 부처에서 TF를 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위 노후 숙박시설을 이 사업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 예산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인데 만약에 노후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그 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TF에서 논의된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추가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된 질의신가요?

○**김도읍 위원** 아니, 그거 관련된 것 아니고 정리는 조금씩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김도읍 위원** 15번, 9페이지.

국가기본도 제작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시지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 이진우** 지리정보과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매월 상습적으로 과다·반복 이월되어서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 이진우 예.

○김도읍 위원 지금 한준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역사업이 국가기본도 수정과 관련된 거지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659억입니다. 24년도에 501억, 내년도 안이 437억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국가기본도 수정 내역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집행률이지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 이진우 예, 집행률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국토부에서 전년 대비 올해 64억 8000만 원 줄여 주십시오 한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집행률을 참고해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64억 8000을 줄여서 정부안을 만든 겁니까, 과장님?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 이진우 내부적으로 일부 줄인 게 있고요. 기재부에서 줄여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64억 8000 줄인 것은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국토부에 통보해 준 거지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것 집행률이 다소 떨어진,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니까 기재부에서 아마 매뉴얼대로 매년 해마다 총사업비를 줄여 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해 주셨네요.

(웃음소리)

○안태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10번에서 제가 의견을 2개를 낸 겁니다. 아까 제가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한 거고요. 건축자재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방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 집행률 저조 때문에 감액 의견 낸 것 이것은 여전히 유지하는 겁니다. 위의 것은 유지, 아래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건축안전 이것은 잠깐 좀 보류를 해 놓고 나중에 보류사업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가기본도 제작은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잠시만요.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제가 오늘 예결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잠깐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국토위 전체회의 때 지적을 좀 드렸었는데 장관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아예 자료도 반영 안 됐다고 해서 말씀을 좀 전에 드렸더니만, 건설기계임대료채납신고센터가 올해 보니까 1억 800만 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



년 예산보다 적고 집행부는 3억 올렸다는데 아예 반영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제야……

○서범수 위원 윤종오 위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종오 위원 아예 번호에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49페이지……

○윤종오 위원 번호에 아예 없으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전에 실무자들이 이제사 한다고 와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되셨습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지역자율계정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성장촉진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공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입니다.

연번 1번과 2번은 보고를 생략하고 연번 3번입니다.

해안및내륙권 발전사업지원은 그 내역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곤란하거나 일부수용 의견을 밝힌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47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에 대한 4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3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봉무 습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5억 증액 의견과 2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23억 800만 원 증액 의견,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20억 원 증액 의견,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1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19억 증액 의견과 10억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7억 증액 의견과 10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1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합천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6억 원 증액 의견과 3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의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그리고 진도의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포항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에 대해서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그리고 영덕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에 대해서도 5억 원 증액 의견이, 그리고 구시포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하중도 친수공간조성 및 명소화 사업에 대한 4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궁남지 부여서동연꽃축제 등 20억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지역균특의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원하려면 지역개발사업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남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3번, 해안및내륙권 발전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은 다 반영돼 있는데 47억, 46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각각 20억씩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페이지,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도 반영 사업이지만 현재 24년 설계 완료 후에 상반기 공사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억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봉무 습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25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4년에 교부된 국비하고 지방비가 다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월 과다 예상으로 증액이 곤란하다는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다음에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은 선행 절차가 필요해서 설계비 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사업은 역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도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계획이기 때문에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역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라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은 24년도 금년도에 교부된 국비 지방비가 상당 부분 대부분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편성 중인 국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설계비 반영인데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신규 설계비로 3억 정도씩 반영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괴산 시구산 개발사업도 25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설계비 한 2억 정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합천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은 설계비 3억 일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도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를 감안해서 3억 원 증액, 다 3억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좀 어려운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마지막 것도 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포항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 설계비 3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영덕의 것도 초기 단계 3억 반영이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 3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것, 전북 김제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하중도 친수공간 사업도 사업 초기 단계임을 반영해서 설계비 3억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빠르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 없으시지요? 있으세요?

○안태준 위원 11페이지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기현 위원님 의견인데 ‘수용곤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국토부에서 송기현 의원님실에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먼저 충남도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조금 정확히……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이 얘기는 소위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국토위원님들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내역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좀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저도 하나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한준호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제가 아까 자리에 잠깐 없는 사이에 아마 일부수용이 그냥 이견 없는 것으로 통과된 것 같은데……

○소위원장 한준호 몇 페이지입니까?

○염태영 위원 이를테면 5페이지에 있는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이 그것 외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수소도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인데, 지금 기재위에서 한편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건축물과 관련해서 국가 탄소절감 목표에 맞추려는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100억을 증액 요청한 것인데 50억을 증액시켰어요. 그에 반해서 11페이지 보시면 수소도시 지원사업이 사실은 1.2기

수소도시로 선정된 사업 9개 도시 중에 5개 도시는 전혀 교부 예산이……

○소위원장 한준호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염태영 위원 그래요? 이게 달라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주말에 두 가지 쪽지에 대한 철회가 해당 의원실로부터 들어와 있고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최종본입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소도시 지원사업이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그게 철회가 된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고 전체적으로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염태영 위원 철회해서 여기 빠진 모양인데 그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9개 도시 중에서 5개 도시는 교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돼서 넘어가서, 아마 신규 지역에 좀 더 추가하느라고 증액은 된 것 같은데 이런 집행되지 않은 데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고,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같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청액의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일종의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어떤 데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에는 증액이 되고 또 꼭 필요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것은 일부만 반영되는 이런 문제가……

○안태준 위원 의견만 주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직 확정 아닙니다.

○염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실제로 집행이 저조한 것들은 줄이더라도 또 꼭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들은 그 수준을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또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수소도시 지원사업이 세 가지 경우는 같이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염태영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 의견을 유지하신다는 건가요?

○염태영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8번까지 이따가 보류사업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준 위원 지금 이것을 다 결정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정점식 위원 예, 그럼요. 보류라고 말씀 안 하신 것은 다 결정된 거예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자 이자에 대해서 이자 4%를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염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 50%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억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민간도

50% 자기가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용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0억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확정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일단 8번은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18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연번 4번부터 20페이지 연번 13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밝힌 사항이므로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연번 14번부터 보고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여수국가산단 적량지구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진달래길 전 구간 4차로 개설을 위한 예산 1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연번 15번, 용당일반산단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수용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김희정 위원님이 의견 내셨던 것처럼 혹시 앞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방금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러면 20페이지 연번 14번·15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전 구간 4차로 개설을 위한 16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계획이 아직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단 계획 승인 후에 진입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반영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5번, 예타 용역비 2억 원 이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21페이지 연번 17번,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도 내역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0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인천 꽃피마을과 검단-경명 간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및 현황도로 확장을 위한 예산에 36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창원 의창구와 관련해서는 동읍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32억 원 증액 의견과 동읍 자여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22억 증액 의견과 도계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경찰훈련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대구 팔현길 도로확장 및 고모마을에서 명목공원 간 도로 건설을 위한 1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및 대구 팔현길 도로확장을 위한 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

되어 있으며, 경북 고령군 좌학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를 위한 9억 원 증액 의견과 경기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5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의 수용곤란 판단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기한 내에 미신청한 사업들,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들 또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한 사업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같은 것을 사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수용곤란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21페이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302억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미선정된 3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선정 사업비 증액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인천 꽃피마을과 검단 간의 연결도로 개설도 앞서 말씀대로 개발제한 관리계획 미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창원 의창구 관련해서 동읍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은 공모 결과 탈락했습니다, 점수가 낮아서. 그래서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수용곤란하고 동읍 자여마을 체육시설도 70점 이하라 탈락했기 때문에 미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계체육공원 족구장도 역시 70점 미만이라서 탈락해서 미선정돼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30억 증액은 앞서 말씀대로 개발제한 관리계획 미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미이행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대구 팔현길 도로확장과 그다음에 고모마을과 명목공원 간의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팔현길 도로확장 사업은 집행률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금년도에 집행률이 1%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진해서 수용곤란하고 고모마을과 명목 간 도로 건설은 법정기한 내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미신청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률이 12%로 굉장히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북 고령군의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은 주된 수혜자가 그린벨트 외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경기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5억 증액은 이미 정부안에 기반영태 있기 때문에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 내역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의 경우에서 보면 국외여비와 연구용역비 증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외여비가 1100만 원, 연구용역비가 2억 해서 2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10억 2000만 원이 아니고요, 2억 1100만 원.

○소위원장 한준호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21페이지 인천 꽃피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 보세요. 뭐가 미비하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두 번째 것 말씀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거 혹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 보거나 하신 적은 있나요? 이게 지금 도로가 전혀 연결이 안 돼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소방차도 진입이 안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 민원이 이용우 의원 통해서 들어온 건데 이런 것은 설사 그런 것들이 미흡하더라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차량 통행이 진입이 안 되는데 현장 확인 좀 해서, 뭐가 제도가 미비하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장구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선정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가 보셨어요, 여기도?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이연희 위원 위원들이 가 봤다고요?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 보신 거예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예.

○이연희 위원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예.

○소위원장 한준호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총 네 가지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가 법 기한 내에 미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에서 탈락을 하거나 사전 행정절차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미진하거나, 지금 이 네 가지 사안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소위원장 한준호 사업계획 부적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이게 GB에 사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 혜택자가 GB 외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정부안에 기반영되어서 안 되는 부분도, 아까 전에 경기 시흥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5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증액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태준 위원 17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기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맨 위에 302억 증액.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02억 3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미선정된 31개 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탈락한 사업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탈락한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태준 위원 지자체 탈락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31개 사업에 대한.

○소위원장 한준호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경북 고령 좌학근린공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수혜자가 GB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주된 수혜자가.

○김도읍 위원 그러면 종된 수혜자 주된 수혜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GB가 있고 이 놀이터가 있고 바로 인근에 학교 유치원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이터를 포함한 그 GB에 사실 어린이 놀이터가……

차관님, GB 지역에 지금 어린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그 놀이터 바로 옆에 유치원 학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방치된 놀이터를 재정비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좀 놀 수 있게 하겠다는데 매정하게 주된 수혜자가 GB에 안 산다. 그러면 앞으로 GB 내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는 아예 손 놓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차관님, 보십시오.

GB 내에 어린이들 있어요? 놀이터 이용할 만한 수혜자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 좋아요. 다 근거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GB 해제된 지역과 GB 지역, 우연치 않게 GB 지역에 놀이터가 있는데 방치돼 가지고 슬럼화되거나 아니면 우범지대화되거나 그러면 전등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정부에서는 아예 손을 놓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재고해 주십시오, 차관님.

○소위원장 한준호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긴 한 건가요?

○김도읍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도읍 위원 낙후되니까, 바로 옆에 학교하고 유치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낙후돼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업도 정비공사거든요, 이게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주된 수혜자가 GB 외 지역이라고 딱 잘라 버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마을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생활기반시설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사단이 가서 좌학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를 봤더니 개발제한구역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거기서 판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무조건 다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도 다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취지하고 다른 취지로



지금 주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내 지방에, 경북 내륙지역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호남이라든지 GB 지역 내의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있나요? 그런데 인근 어린이들이 이용하겠다는 건데,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어서. 그 말인데.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돌려놓을 테니까 이따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고.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편익 제공을 하기 위해서 302억 증액이 31개 미선정된 사업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미선정될 때는 대부분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미선정이 된 거고 1개 사업당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씩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전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전체를 다 잘라 내기보다 몇 개 사업이라도 살려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렇게 되면 다른 타 광역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급을 해 주면, 대구시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하면 거기 다 일정 부분 해 줄 거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형평 문제를 따지면 여기 있는 사업들 전체 정부 의견에서 저희가 의견 달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게 이거하고 방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 2개는 다시 한번 의견 드린 대로 판단해 보시고 이따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GB 내의 도로 개설은 구두로만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개발지역 관리계획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연희 위원 구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 2개 사업만 보류를 하고……

○김희정 위원 잠시만요, 저 의견 있습니다.

연번 17번, 앞서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 이게 정비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현장 사진 다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앞서 해안및내륙권 발전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설계비를 다 3억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명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기 인천 남동구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는 4억으로 했어요. 앞이랑 큰 사업명은 다름니다만 내용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3억인데 여기는 4억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 국외여비하고 연구용역비, 아까 10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던데 뭔지 금액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4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희정 위원 아니요, 놀이터부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일단 실사단의 평가를 존중한 건데요. 그 부분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고요.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보류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다음에 인천 남동구에 설계비 4억 증액 요구를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해안권 설계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이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국외여비는 원래 1100만 원이 증액이고 연구용역비가 2억 증액이라서 정확하게 합치면 2억 1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잠깐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맹성규 위원께서 증액을 요구하신 그 서면질의서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고요. 서면질의서상에는 정확하게 국외여비 2000만 원, 연구용역비 10억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행정실의 어떤 오타나 오기나 그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에서는 자료를 2000만 원이랑 10억으로 만들어 왔는데 정부가 위원장실이랑 무슨 협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준 내역이랑 다른 내역을 보고하면서 마치 다 확정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실도 모르는 일을?

그리고 다른 위원들 사업비 다 3억으로 책정한 내역하고 여기 4억으로 한 차이 세부내역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것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서류상에 있는 것과 지금 정부 보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 서류에는 현재 10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수용이라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는 일부수용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서류랑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있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위원이랑 얘기를 끝냈으면 심사 자료도 바뀌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행정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제가 차관님께 하나 여쭙볼게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 한 명하고 일하든지!

○소위원장 한준호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한준호 방금 질의 주신 내용도 있고 한데 아까 설명 주실 때 전체 국외여비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0억 해서 10억 2000인데 정부에서는 수용이라고 해서 써왔는데 연구용역비가 10억이 아니라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취지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미 정부안에 8억이 반영돼 있고 8억을 10억으로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이 증액이고요. 국외여비도 정부안에 9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2000만 원으로 늘리자는, 그래서 1100만 원이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설명하신 것과 지금 사실 위원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래서 제가 일부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증액상으로는 2억 2000이 증액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억 1100입니다.

○정점식 위원 증액 요구를 할 때 증액된 금액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요.

○김희정 위원 행정실에서는 오류가 없었다라고 방금 행정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증액 요구하신 위원님이 증액요구안에서 그렇게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안태준 위원 한 얘기만 할게요.

차관님, 이번에 경기도 그린벨트 또 다 푸셨잖아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일부 해제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해제했잖아요. 그 일부 해제를 계속해서 신도시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국토부에 항의했던 게 ‘그린벨트가 국토부의 개발유보지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위원들이 국토위에서 발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그날도 했었는데요. 수도권이 특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니다, 서울 주변의 연접지역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이게 개발이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는 엄청나게 잘 사는데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기는 한데 아예 시골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렇지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을 제가 조심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곳을 달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가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아까 한준호 위원장님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 첨언으로 하고, 저도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김도읍 위원 안태준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차관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국토부의 특권 중의 하나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책무입니다.

○김도읍 위원 책무입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인색하게 안 해야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은 책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안태준 위원님 할 때 개발의 보류지역 쥐고 있는 특권으로 본다고요. 특권이 아니고 책무 같으면 개인 재산권이 인근 지역과 그렇게 차이가 나면 국가가 해 줄 건 다 해 줘야지요. 안 그러면 풀어 주든지.

두 번째,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과연 환경보전이라든지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될 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대상지인지, 안 할 말로 인천 송도든 어디든 도시개발이 되는 데는 녹지가 조성되고 아파트도 녹지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오히려, 현재 농촌지역 등등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비닐하우스, 거기에 각종 연료 때지요.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신도시보다도 자연환경이라는 게 더 열악해요. 알잖아요. 그냥 노지작물이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재배를 한다고. 시설재배를 하면 각종 농자재들이 얼마나 오염물질이 많습니까, 비닐부터 해 가지고? 물론 요즘 좋아지기는 했지만. 온천지 폐비닐 같은 게 땅에 묻혀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 1·2등급에 대해서도 국가전략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대체적으로 해 주겠다, GB를 해제해 주겠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김도읍 위원 그렇게 대통령께서 공언을 하셨는데 국토부는 아주 인색해요.

차관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얼핏얼핏 들여다보니까 아주 인색해요.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3개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태준 위원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 향상을 위한 302억 중 일부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 철회하시는 거예요?

○안태준 위원 저도 일부라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경북 고령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 이 2개는 보류로 놓고, 검토해서 말씀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나머지 부분들 넘어가고.

저희 오늘 오전에는 도시재생사업까지만 진행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 위원 오후에는 몇 시에 다시 하나요?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진행하는 동안 미리 시간을 좀 보고, 전체 남은 예산들 보고 시간을……

오늘 점심시간 좀 짧게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8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수용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안정적 추진을 위한 296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진주 상대지구 사업에 대한 6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에 대해서 51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심곡본동 어울림 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30억 증액 의견이 있으며 원종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 중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및 1기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17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위한 1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및 부산 해운대구·북구에 설치를 위한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17억 4000만 원에 맨 밑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설치 예산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96억 증액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사업 추진실적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재 정부안이 543억인데 현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용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비 교부 대상지가 열세 곳인데 그중에서 여섯 곳은 이미

전액 교부를 할 예정이고 여섯 곳은 실집행률이 거의 1~2%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하고요. 한 곳은 25년도 건축설계가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진주 상대지구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1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정부안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10%까지로 매우 저조하고 또 25년 상반기까지 건축설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은 역시 정부안 33억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실집행률이 현재 10월에 5%밖에 안 됩니다. 25년 상반기까지 건축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심곡본동 어울림 사업은 이미 총 80억을 20년부터 23년까지 교부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전액을 교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 증액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요. 추가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건데요. 원종동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도형 도시재생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마지막인데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미래도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 설치 및 1기 신도시에 용역비 등 해서 17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16억 4000만 원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1억 2000만 원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17억 4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24페이지 진주 상대지구 핵심 거점시설 착공 관련 예산,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이걸 수용 불가를 말씀하신 게 실집행률이 10%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집행을 위해서 추가 국비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고, 만일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사업기간이 27년까지 연장이 되고 그사이에 다시 또 건축자재 등 물가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일단 정부안 13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정점식 위원 12억 8000만 원.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러니까 약 13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저희는 사업 추진 실적이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집행률도 낮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축 설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결국 실시설계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이 계획이 26년 사업 준공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1년 사이에 나머지 전부 다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돼야 26년 준공이 되는데 이 12억 8000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26년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중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26년까지 총 국비가 105억이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실장입니다.

계획상 사실 2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건축 설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이월이 될 거고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집행 가능한 만큼을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진전되는 걸 보고 그때 봐서 그다음 해 26년도에 다 포함을 할지 그것을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것은 조금만 보류해 주시면 오후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 놓고 한번 중간에 같이 다시 한번 정부 측하고 이야기 나누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24페이지 첫 번째, 염태영 위원님하고 같이 올렸는데 이 부분도 보류했다가 새롭게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김희정 위원 저도 반려동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과 조금 말씀을 나눠 볼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실까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해 놓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28페이지, 혁신도시발전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관련한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6건

전부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비 50억 원 증액 의견과 전북혁신도시 내 생태 친수공간과 문화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과 47억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혁신도시발전특별회계, 29페이지입니다.

충남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비 50억 증액해 달라는 부분은 혁신도시법상 충남혁신도시 어디에 할지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소위원장 한준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반영을 할지 모르겠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충남혁신도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혁신도시 같으면 진주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어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장 한준호 충남 내 어디로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래서 이것 공사비를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북혁신도시 내 친수공간과 문화복합거점을 위한 설계비 10억 증액인데요. 이것은 지자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안부 예규에 정한 지자체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다음 30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요. 소위 말하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 4%p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평균 신규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집행 가능 규모를 고려해서 저희는 일부수용해서 15억 정도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쭙 보고, 전북혁신도시 내에 지금 거점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10억 정도를 보태 달라는 게 이춘석 위원님 부탁 말씀인데 지금 이게 지자체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 내에서는 국비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이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게 소위 말하는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이나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이 부분이 해당되어서 이것은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



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게 국토부 혁신도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주민들 간에 높지가 않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호남제일문이라고 하는 입구 쪽에 있는 부분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춘석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국토위예다가 제기를 하신 문제가 지금 호남에 대한 홀대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국토교통부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 한동욱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 한동욱입니다.

이게 수차례 제기되어서 저희가 지자체 외에도 행안부 기재부에 수차례 계속적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단 이 예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해서……

○소위원장 한준호 지자체 사업이 명확하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 한동욱 예,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수용곤란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께도 내용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몇 년 안 됐지요? 문화·체육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국토교통부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 한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서 공백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들은 해당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이춘석 위원님이 혹시 돌파구를 찾으려면 문체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에 해당될 수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십시오.

○국토교통부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 한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의견을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31페이지, 주택토지실 소관 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용 의견을 밝혔으므로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용은 그냥 넘어가라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연번 2번,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ISP 용역 예산 1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사업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및 실집행 저조 등을 감안하여 예산 117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집행을 추이를 고려하여 82억 46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안 유지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번 4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을 하고 있으나 민홍철 위원님의 서면질의서상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4페이지는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대기자통합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161억 500만 원 감액 의견과 80억 42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61억 원의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역사업인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주택통계 오류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명확한 원인 등이 확인된 이후 예산 반영을 위해서 28억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2025년도 증액분 23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스마트 생활소음 실증평가 및 층간소음 체험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북 제천의 스마트 생활소음 실증평가 기반 및 층간소음 체험센터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예산 후입법 행태를 지양하기 위해서 신규 예산을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안은 11월에 국회 논의 예정이고 동 사업은 본사업하기 전에 사전타당성, ISP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법률 제정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선입법 후예산 반영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감액 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보증금 3억 이하의 저소득층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수수료를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의 지원 또 전세보증금의 여러 가지 확실한 보증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집행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 보증 가입 시에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해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를 해서 앞으로 집행률도 제고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업무위탁은 금액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사관 추가 채용 등에 5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첫 번째 대기자통합시스템 이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통합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대기시간을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발의됐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논의하려다가 김기표 위원님이 출장 가서서 논의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서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은 특별히 문제없이 연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인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24년에 이미 기착수해서 금년에 5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인데 이게 감액할 경우에 재구축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해서, 특히 현 시스템은 과거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기반으로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사용성 제고와 통계의 생산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고 감사 결과는 재구축과 운영 시에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층간소음 관련해서 충북 제천에 스마트 생활소음 체험센터 20억 증액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의 재단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세종에 LH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시설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중장기 검토 후 추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2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안태준 위원** 일단 32페이지, 2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11월에 법안 심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거나 계속 선예산 후입법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의견을 국토부에서는 자주 내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삭감입니다. 이러면서 국회에서는 아직 입법이 안 됐는데 입법이 될 거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관행을 확실히 없앤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정말 차질이 없이 입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저는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반드시 그건 전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마지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건 국토부에서 수용 입장을 내셨는데 제가 사실 이걸 감액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액 입장을 철회를 하고 부대의견 등을 달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걸 공인중개사 쪽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실지 4% 5%밖에 쓰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쓰는 시스템은 거의 99%의 공인중개사들이 쓴답니다, 거래시스템을,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시스템은. 그러면 왜 이걸 안 쓰냐 그랬더니 너무 어렵대요, 쓰기가. 그러면 이 안 쓰는 걸 쓰라고 홍보하는데 3억을 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99% 쓰고 있는 시스템을 연동시킬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감액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산을 홍보만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 4% 5%밖에 안 쓰는 것을 또 이걸 홍보를 한다고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실지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공인중개사들한테 의무를 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하고 있는데 그쪽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거래하고 있는 전체를 다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 시스템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현업에서 99% 쓰고 있다는 데 4%짜리를 그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건 다시 한번 조사를 꼭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차관님, 이것 민간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 구축은 어디서 한 겁니까, 민간에서 쓰는 것은?

실무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저쪽 같은 경우는 계약 기능 같은 게 없으면 단지 정보만 주는 그런 기능만 있습니다. 전자계약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이라든가 확인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이용률이 낮습니까?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아마도 지금까지 종이로 계약하는 관행들이 아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자계약 이용률이 낮는데 최근 한 3년간 보면 거의 13%씩 나오고 민간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한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간에서 조금씩 인식이 좋아져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전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있으세요, 다음 내년도에?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중장기적으로는 30% 보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에서 한 1만 9000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저희들 집계해 보니까 한 6만 건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점식 위원 일반 종이계약하고 전자계약, 전자계약의 장점은 뭐니까?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일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약으로 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것 금리가 0.1에서 0.2% 정도 인하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들이 쓰기 불편해하는 그런, 정정 기능 같은 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 계속 시스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매매와 임대 모두 적용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예방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림에도 불구하고 안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민간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어쨌든 DB가 코드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면 사실 DB 합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안인 건 알겠고 다만 선예산 후입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고려를 심각하게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위원님들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의견 주십시오.

○손명수 위원 32페이지의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이건 제가 권영진 의원님과 같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이 통과될 걸로 믿고요. 안태준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페이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이걸 위원님들 간에 입장이 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예전에 자기 돈으로 또는 부모님께 조금 보조를 받은 돈으로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주거사다리 기능을 했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작동을 해 온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취지는 선한 취지로 했겠지만 전세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출 지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왜곡되고, 더구나 반환보증이 정착이 된 이후로는 완전히 사기꾼들의 표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씩을 지금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조원을 제대로 서민 지원에 써야지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이런 전세 지원이 아니라 월세 지원으로 가야 된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장관님도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더구나 지금 특히 빌라나 이런 거 할 때 ‘여기 반환보증됩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사기로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30만 원, 40만 원 하는 이 보증료까지 지원을 하면 ‘여러분 돈은 하나도 안 듭니다’ 하면서 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무엇이 진정한 서민 주거 지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진정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이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류하시고 위원님들도 제대로 토의를 하시고 국토부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기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혹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다른 건인가요?

○정점식 위원 제가 관련해서.

지금 이 삭감 의견 중에서 그 이유가 사업지연 및 실집행률 저조라고 했는데 지금 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차관님? 아니면 실무자분께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자료가 금년 9월까지 있는데요 집행률이 59%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실집행률 저조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실집행률은 20%고요.

○정점식 위원 59%는 뭘니까? 실집행률은 20%고.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하창훈 청년주거정책과장 하창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로 교부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59%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실제로 나간 돈 기준으로 실집행률을 산정하면 20.4%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차관님, 실집행률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 삭감도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 제도개선을, 신청 간소화든 절차 개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5년부터는 신규 보증을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담당하는 과장님 계세요?

차관님, 지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국토안전관리원에 업무 위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23년 본예산은 얼마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3년 본예산 26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24년 예산이 좀 증액되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4년 예산이 27억이었고요, 내년 정부안은 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민홍철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조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원래 법정 기한 내 맞추려면 조사분석 인력을 한 6명을 더 추가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도읍 위원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게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2021년에 저희들이 하자 판정 기준을, 하자로 인정하는 기준 자체를 당초의 31개에서 44개로 늘려 주면서 그때 하자 접수된 건이 평소보다 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7600건 가까이 늘었고요. 그 부분의 처리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조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현재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정부안 편성할 때 실장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그 부분 조사관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35페이지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이게 노후 시스템 개선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계속사업이고.

내역사업은 총 34억이지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 예산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5년에 재구축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안 올라온 이게 없으면 내년에 완료가 안 되겠네요, 만약에 감액이 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재구축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2개만 여쭙볼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 손명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117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실집행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정부 측에서는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감액은 아니어도 일부 감액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손명수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임대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100%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 주던 걸 지금은 90%로 줄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줄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HUG에서 현재 전세반환보증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증사고가 나는 건은 90% 초과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기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것을 90%를 다시 80%,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낮춰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엄연히 지금 전세제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리고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월세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월세가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관계에서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료 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설명이 좀 되셨나요?

○**서범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차관님께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긴다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 이걸 뭘니까?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사업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 주는 걸 민간위탁사업비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산하단체 아닌가요? 산하기관이잖아.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예, 산하기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걸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현재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소위원장 한준호 답변 주신 게 애매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마지막 하나만 여쭙보면, 35페이지의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통계 오류가 났었잖아요. 이 부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자체적으로 원인은 찾으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원인을 찾아서 보정까지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보정까지 다 하셨고. 이게 대개 DB가 틀어지거나 쿼리(query)가 틀어지거나 하면 틀어질 텐데 원인 규명은 다 하셨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감사원 감사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전세보증금반환제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세보증금반환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꼭 지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가 굉장히 서민을 위하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100%에서 90%로 줄이니까 벌써 거기에 대해서도 왜 줄이느냐는 얘기를 하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난번 상임위 때 어떤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보증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래 반환보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빌라 같은 건 실제로는 50%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90%로 낮췄다고 그래서 제도개선이나, 그것은 전혀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10%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한 범위고.



그래서 이걸 80%로 낮추는 것마저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봐 가면서 하겠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1년에 5조씩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게 거의 10조인데 10조면 2억 5000짜리 4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어서 저렴하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주거복지제도지 어떻게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게 마치 좋은 제도인 것처럼,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몇조씩 계속 퍼 주겠다는 얘기에요? 뻔히 이미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든 청년층이든 월세를 지원하면 그건 100% 지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전세는 사실상 지원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다 갚아야 될 돈이고 보증료는 보증료대로 들어, 이자는 이자대로 들어, 나중에 사기꾼이 가져가면 그건 그대로 국고 손실이야. 이런 엉터리가 어딴어요. 그러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지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작업꾼들은 온통 문자 보내 가지고 ‘보증을 축소해 나가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식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이미 17년 이후의 통계로 보나 월로 보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고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8년째예요. 그러면 서둘러서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100%를 90%로 낮추면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했던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연립 같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가격 산정을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가격 부풀리기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시가격으로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것은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제도를 만들 당시에 지금 손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정책 개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된 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37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주택정비사업(융자)와 관련해서는 4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계획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446억 9500만 원 감액 의견과 함께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12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3번,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7233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와 관련해서는 HUG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하므로 60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6번, 분양주택(용자)와 관련해서는 사업 승인이 저조하며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감액이 잦으므로 2716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공공임대(용자)와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3276억 원 감액 의견과 함께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8번, 민간임대(용자)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떨어지므로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임대 등에 대한 기금 용자액의 738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내역사업인 준주택전세전환지원에 대한 기금 용자액에 대한 339억 52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울러 262억 원 감액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다가구매입임대(용자)와 관련해서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8044억 38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SH공사 매입임대 단가 현실화를 위해 6925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0번, 통합공공임대(용자)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용자 확대를 위해 1025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SH공사 재정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804억 원 증액 의견 및 면적당 지원단가를 15% 인상하기 위하여 438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76억 47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76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7페이지입니다.

주택정비사업(용자)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사업 즉 용역비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용자조건 등이 미흡한 상태이고 서울시에 유사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용자조건 등은 이미 저희가 정부안을 가지고 있고 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수요를 확인해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유사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당초 예산이 현재 300억 정도 되는데 수요는 한 1377억 정도 돼서 서울시가 이를 다 대응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7%의 우량 사업장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임대주택이나 정비기반시설계획이 반영된 주로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배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배포를 해 주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건데요.

쟁점이 크게 네 가지인데 용자조건 등이 미확정된 것은 2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에 용자 기준 검토안을 만들었고 예산만 확정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를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유사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사업이 수요를 감당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상위 7% 우량 사업장은 공공성이 높은 조합에 지원토록 설계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 심사기준 보면 공공성 안정성 사업성 이렇게 나눠 났는데 이 중에서 공공성 비중을 어느 정도나 두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가 심사 배점을 계속 시뮬레이션해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30~40% 정도로 세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30~40%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장 박용선 예.

○소위원장 한준호 이게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연번 2번, 이차보전 지원인데요.

이차보전 규모를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금 직접 용자로는 수요가 대응이 곤란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이차보전 금액을 감액할 시에 기금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청년주택대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청년드림통장이 금년 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할 때 일시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청약 당첨 시점에는 대부분 납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6000억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벌써 저희가 기금에서 현금으로 7000억 또 도로공사 현물출자를 4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조 7000억을 공공 부문에 했고 앞으로는 HUG가 든든전세 쪽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HUG의 재무 개선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6000억은 저희는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단기 자금 예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은 일부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40페이지 6번, 분양주택(용자)인데요.

사업승인이 저조해서 감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성상 항상 12월에 승인 목표 대부분이 들어와서 달성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예산편성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승인할 때 45% 자금을 주던 것을 착공해야지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90%.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24년 대비 한 27%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용자) 사업인데요.

사업승인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연말에는 승인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예산편성 체계를 개편해서 금년 대비 한 19%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민간임대(용자) 사업인데요.

민간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자,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민간임대 사업도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고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이 있기 때문에 공적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 관련해서 안태준 위원님과 한준호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공공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에 반영하도록 장기임대 등 각각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 개정 전이라도 실버스테이 같은 다른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안 유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신유형 장기임대 369억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준주택전환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금액 533억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안 유치가 필요하겠습니다.

42페이지 9번, 다가구 매입임대 단가 현실화는 저희는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 지원단가 비율이 한 66%밖에 안 되는데요. 급격하게 올리면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24년 대비 3000~5000만 원 증액해서, 저희는 지원단가를 일부 상향하는 3659억 정도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공공임대(용자) 관련해서 공공임대 공급에 필요한 용자 확대를 위해서 증액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정부안에 전부 물량이 충분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권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단가를 증액해 달라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면적당 지원단가를 15% 인상하자는 이 부분은 재정 부담 감안해서 저희가 7% 정도 하게 되면 한 78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H가 하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76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제 위원님들 의견 들을 텐데 지금 혹시 안태준 의원실의 보좌관 누가 와 계신가요? 대부분 감액 의견이나 의견을 내신 게 안태준 위원님께서 집중적으

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38~42쪽까지는 회의 참석 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류해 놓고 안테준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고 나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말씀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이 안 오시면 넘어가야 되지 그걸 위원님 안 오신다고 모두……

○소위원장 한준호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통으로 의견을 내신 거라……

○서범수 위원 그러면 오셔야지, 자기가 필요하면 오셔야 되는데.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비슷하게 걸립니다. 금방 오시니까……

○서범수 위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하시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다른 데 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통으로 스톱해 줘’ 이게 지금 의사진행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말로 그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좀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와 관련해서는 다가구주택 매입단가 현실화를 위해 29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12번,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반영을 위해 300억 원 증액 의견과 148억 원 증액 의견 및 147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3번, 국민임대 출자와 관련하여서는 45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그리고 연번 14번, 영구임대 출자와 관련해서는 135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연번 15번, 행복주택 출자와 관련해서는 36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연번 16번, 통합공공임대 출자와 관련해서는 통합공공임대 건설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2493억 1400만 원 증액 의견과 면적당 지원단가를 15% 인상하기 위하여 249억 증액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33억 원 증액 의견과 132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번 17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영구임대시설 개선과 국민임대시설 개선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324억 5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LH 영구임대 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 1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14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과 142억 원 증액 의견 및 14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내 에어컨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62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과 94억 원 증액 의견 및 93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과 관련해서는 7209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점 절차 등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므로 계획액 4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43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매입단가 현실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서 24년 대비 면적당 3000~5000만 원 증액한 293억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12번,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부분은 부대비용이 빠진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148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13번·14번,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출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년 3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통합공공임대로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44페이지 15번, 행복주택 출자 부분도 이미 20년 3월에 통합공공임대로 전면 시행 중이고, 그래서 잔여 물량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6번, 통합공공임대 출자입니다. 첫째,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재정 부담 감안해서 면적당 7% 해서 한 130억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한준호 죄송한데 행복주택 출자 관련해서 수용곤란 의견 한 번만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앞부분 13번 14번 15번이 다 같은 건데요. 과거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년 3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앞으로는 다 통합공공임대로 짓고 거기에 각각의 소득 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만 하기 때문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다음 16번, 통합공공임대 출자 관련해서 LH 시범사업 추진 출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132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45페이지 17번입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이 부분은 첫째, 실제 시설개선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초 계획 수립해 연말에

모두 실행하는 구조고 최근 3년간 실행행률이 100%였습니다. 올해도 100% 다 집행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LH 영구임대 단지 내에 노후 사회복지관 10개소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142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내에 어컨과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설치공사 가능물량 등을 감안할 때 93억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프트 사업인데요. 출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 그리고 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건축비로 굉장히 싸게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사항입니다.

47페이지, 도시계정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자율주택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미 17년부터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주로 초기에 용역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46페이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24년 예산이 2129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5년이 1728억이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대 내 리모델링하고 창호나 벽지 다시 바르고 해서 완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집 바깥의 공용부를 개선하는 시설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서면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리모델링 사업 같은 데는 저희가 항상 가서 보고 있고요.

○**김도읍 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부산 북구에 가면 영구임대가 한 40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김도읍 위원** 그런 공사하는 게 전혀 안 보이던데?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제가 된 곳이 있다면 거기는 재정비를 검토 중이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요, 재정비가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벽지 창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국감 때도 내가 얼핏 언급했지만 LH에서도 이사 나가는 분들에게, 임차인들에게 벽지 값 이런 것을 다 받아요. 그런데 또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제가 벽지는 말씀을 좀 쉽게 드린 거고 이것은 완전히 다 부수고 싱크대부터 짝 다 고치는 완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만 호씩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과장님, 이것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수혜를 입는지 혜택을 보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노후 사회복지관 10개소 정비한다고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컨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증액을 요구하는 이 사회복지관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지금 전체 영구임대 사회복지관 중에 이렇게 오래된 게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지자체 재정이 팽창아서 알아서 수리가 된 곳이 있고요 안 된 곳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총 88개소가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H가 신규사업으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아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10개소를 해 보는 거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예산이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원래는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것에 있었다가, 이게 집 안이 아니고 바깥이니까요. 사회복지관에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지자체의 소관이다 그래서 보조금법이 개편되면서 그런 것의 영향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되살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 전수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8개소 정도가 손봐야 될 사회복지관이라 그런 것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것 내년에 전수조사해 갖고 전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자체 사무는 운영을 보조하는 거지, 지자체에서. 시설은 분명히 LH 거예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20년이 되어 가지고 문이 부서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도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거든. 지자체는 운영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LH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자자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능력되는 지방의원님들이 있는 데는 겨우겨우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전면적으로 한번 실사를 해서 가지고 개보수



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딱 편성해 갖고 하십시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국회에, 제가 내년 예산 때 국토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는 기재부가 안 하면 국토위에서라도 반드시 해 가지고, 결국은 보십시오.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인데 서비스 전혀 안 된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진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전 지역에서 비슷한 의견을 주실 겁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 겸 차관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서범수 위원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것 진짜 심사자료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서범수 위원 어떤 측면이냐? 예를 들면 4페이지 3번에 맹성규 위원장님 것 수용, 23페이지 17번 맹성규 위원님 수용, 26페이지 18번 맹성규 위원님 수용, 32페이지 맹성규 위원님 수용, 45페이지 맹성규 위원님 수용, 46페이지 맹성규 위원님 수용, 49페이지 맹성규 위원님 수용.

물론 위원장님 존중을 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가 죽 훑어보니까 회한 하게도 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은 전부 가타부타 없이 수용.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딱 형식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게 지금 맞나?

○김도읍 위원 오늘 파행이다, 파행.

(웃음소리)

○소위원장 한준호 잘 대답해 주세요.

○서범수 위원 차관님, 어찌 생각합니까?

○소위원장 한준호 지금 전체 수용된 맹성규 위원장님의 내역들이……

○서범수 위원 받아들일 만해서 받아들였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에 있어서도 좀 이상하다, 지금 이 전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마 맹성규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내시지 않고 단독으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하필이면 단독으로 낸 것을 다 수용해. 일부수용도 없고 전부 수용이야. 수용불가 하나도 없고.

○소위원장 한준호 아마 맹성규 위원장실을 통해서 제출이 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서범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섞인 것도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내가

터치 안 했어. 딱 맹성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낸 것만 전부 가타부타 없이 수용.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데 저희가 소위이긴 한데 예를 들어 46페이지의 내역사업 주거 복지사 배치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 지역구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서 아마 이게 위원장실을 통해서 제출된 걸로……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면 다 되겠지.

○전용기 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한준호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아니, 이것 짚고는 넘어가요, 차관님. 이것 그냥 웃고 넘길 것 아닙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 짚어 주신 5개 항목들……

○서범수 위원 5개가 아니고 7개 8개인데.

○소위원장 한준호 5개 아니에요? 7개예요? 확인해 가지고 설명 주세요, 이따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회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4개소에 10억씩 시범사업 실시하겠다는 건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전국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현재 468개 정도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거기에 지금 4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가 돼요?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으면서 특정 지역에 특혜만 주는.

선정 절차가 있어요, 기준이? 4개만 하는, 1%만 하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린 자율 주택정비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초기 사업비, 용역비와 설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는 2%대 초반이고요.

○이연희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것을 468개소의 4개, 1%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정확히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말씀드리면 468개 중 조합설 립인가를 받은 100개소 중에서 25년도에 초기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장 10개소에 초기 사업비 40%를 지원하는 거여서 실제로는 10개 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정기준 절차가 있냐고요. 기준이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HUG에서 용자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약정 체결 후에 용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유형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할 거면 4개소로 한정하지 않고 기준에 충족하면 다 용자를 해 줘야지. 어떻게 4개만 딸랑 해 줘 가지고 그게 무슨 활성화가 돼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4개를 한 이유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고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개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중에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내년에 지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10개소에 대해서 40%를 지원하는 이유는, 4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개소가 되는 거고요. 4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자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용자를 받은 사업장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장에서 100개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중에 10개소는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10개소도 만일에 신청을 한다면 실제로 용자 실행 가능한 사업장이 한 40% 정도 돼서 최종 4개소 정도가 집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집행 가능성보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할 때 초기에 많은 금액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사업으로 4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지금 제가 약간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적게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이렇게 신규 사업지 4개소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 10억씩 용자하는 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연희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 이것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4개소를 선정을 하는 데 주택도시기금을 쓰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 건설사들 이들에게 용자를 해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바꾸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그냥 빌라를 빌라로 바꾸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벌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를.

그래서 이번에 그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처럼 초기 사업비를 하는 것을 시범사업 비슷하게 첫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재건축도 과거처럼 그렇게 수익성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일정 부분 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데 저도 조금 이상한 것은 재건축 사업장에게 기금을 통해 가지고 용자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원래 좀 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 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데 재건축 사업장에 기금을 통해 가지고 용자를 해 주겠다, 10억씩 네 곳을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던 것을, 소위 말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소규모 한 동 짜리 아파트를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공사비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성이 많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초기에 용역비나 설계비 같은 초기 사업비를 일정 부분 저리로 용자를 해 줘서……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보통 재건축을 하는 데가 건설사들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조합에 해 줍니다, 조합에.

○소위원장 한준호 그 조합에 10억씩 해 준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 4개 하고 그다음 해는 더 늘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첫 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수요나 소규모 재건축이 얼마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느냐 이런 측면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게 200세대 미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8개가 아니고 10개 중에 4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 10개는 이미 다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는데 거기에 뭘 또 용자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그런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재건축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활성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잠깐 보류를 해 놓고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재건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 가지고 10억씩 용자를 해 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부가 설명을 소상히 하고 일단 보류로 빼놓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효과성 검토는 해 봤나요? 얼마를 주면 재건축이 활성화 된다는지 이런……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초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용역비나 설계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 거고요.

○소위원장 한준호 돈은 그렇게 들지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그런데 사실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다음으로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00개 정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자를 안 해 줘서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 측에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자를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어떻게……

○이연희 위원 보류해 놓고 나중에 설명을……

○소위원장 한준호 예, 보류해 놓고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듣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들……

○이연희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13번, 국민임대 출자 관련해서 저하고 문진석·안태준 위원이 당초 국토교통부 요구 수준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는 것인데 국토부가 수용 곤란하다고 한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증액을 해 달라면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을 싫다고 그러니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13번 14번 15번이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년 3월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행복주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업을 안 합니다. 20년 3월 이후는 통합공공임대라 해 가지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주로 지어서 거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달리 정하고 그다음에 주택 규모를 달리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구임대단지가 있었고 행복주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통합공공임대 하나로 통일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구임대에 들어가는 분들은 똑같은 평형에 들어가는데 보증료와 월세를 더 적게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안 정도로 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정부안을 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부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제출된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이것 잠깐 좀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신규 국민·영구·행복 주택은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기승인 물량에 대한 지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저희들이 받게 되면 거의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처음에 국토부에서 안을 올릴 때 이렇게 올렸냐 그 말이에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 체계를 바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승인 시점에 한 45% 주던 것을 승인 때는 10%만 주고 이런 예산편성 체계에 대한 협의를 재정 당국과 하는 차나에 지금 기시행 중인 국민·영구·행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출자가 바뀌면 더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부처안은 말씀하신 그 안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체계 개편을 하면서 출자는 건드리지 말자 해서 다시 감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연희 위원** 지금 설명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이 출자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하고, 지금 차관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업이 없어졌다면서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제도상으로 이제 더 이상 승인을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없어진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기승인된 물량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출자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국토부가 원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아니요, 바뀐 것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받으려고 좀 더 냈다가 그럴 필요 없어져서 이렇게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통합공공임대를 더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소위원장 한준호**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여쭙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통합임대로 합쳐졌기 때문에 기승인된 것만 지출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증액하지 않는 선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국토부에서 미리 당초 요구안에 담아 놓은 것은 예산편성 체계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기승인된 거라도 털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아서 처리를 해야 했는데 통합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해 가지고 정부안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올려놓은 것은 어렵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그러니까 출자가 승인됐을 때 20%, 승인 2년 차에 25%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체계 개편을 해 가지고 혹시 사업자들이 어려워질까 봐 출자를 좀 많이 받는 방식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고 굳이 출자를 바꾸지 않아도 지금 출자 체계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당초 안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 요구한 게 1700억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이 25년도 예산을 할 때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줄인 만큼 야당에서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이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가 원래 요구했던 안만큼 증액을 하라는 요구예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수용곤란하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지금 차관님이랑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을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갈 돈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연희 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왜 처음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당안은 국토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증액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들이 예산 초기에 기재부랑 협의 단계에서 제출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남은 기승인 물량 잔여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승인 당시에 20% 그다음에 2년 차 25% 이렇게 받던 것을 착공 중심으로 바꾸자고 해서 착공되기 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10%만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자체가 사실은 그 많은 예산을 다 담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담게 되면 불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염태영 위원** 아까 논의를 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좀 소상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준호** 몇 페이지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염태영 위원** 43페이지.

우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돼서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미반영되어서 매입부대비를 증액하는 것이 147억 이렇게 증액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147억 7300만 원.

○**염태영 위원** 그게 7500호에 대한 매입부대비용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7500호입니다.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난번에도 국토부장관께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7500호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인정된 전체 2만 3000호에 비해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뽕뽕하게 30%밖에,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잡힌다는 것은 정책을 처음부터 30% 수준으로 설계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피해주택을 매입하는데 적어도 전체 피해주택의 육칠십 프로는 해당이 되어야지 어떻게 30%만 갖고 정책 설계를 하느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일을 시행하는 LH가 자의적으로 매수권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육칠십 프로는 매입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었고, 적어도 30%는 너무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냥 30% 7500호에 대한 예산을 부대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이 얘기는 매입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매입 예산도 1만 5000호 정도로 상향 설정하면 이것은 아마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하는 일이 또 벌어질 텐데 실제로 여기서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적어도 대상주택의 육칠십 프로는 잡아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담당 과장이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설명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매입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경매 유예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5000호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돼서 11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호를 설정을 했고요.

다만 걱정을 하셨던 LH 부분에 대해서는 7500호에 더,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것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대비용도 그 차원에서 같은……

○염태영 위원 애초부터 정책의 목표를 적어도 현실성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수치로 잡아 놓아야지. 정말 어렵게 만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개정법에 따라서 이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예산을 잡으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찰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 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입되지 않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30% 수준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준호 차관님, 이거 말씀하신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필요시에는 기금에서 운용 변경을 해서 하겠다, 필요는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세피해주택 매입에 대한 소극적 이런 걸로 보인다면 이것은 예산을 증액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300억까지 증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지금 안태준 위원님 오셨는데, 38쪽에서 42쪽까지 안태준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들이 꽤 많아서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여기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왜 안 받는다는 의견을 못 들어서.

○소위원장 한준호 보좌관께서 내용 전달은 안 했나요?

○안태준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차보전 지원……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번 2번.

○안태준 위원 저도 이것을 얘기를 하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지 말자 이렇게 들릴까 봐 그러는데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차보전 규



모가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는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는 유지가 필요한데 용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1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25년 지출 계획이 296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상 지출이 해마다 증가해서 올해 계획에는 25년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무려 7배 정도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최근 2~3년 사이에 이차보전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오히려 이것은 직접 용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 재검토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저는 이거 감액 의견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다 유념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디딤돌대출 일부 보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이나 청약저축 같은 기금의 여러 가지 조성 재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자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러가지 기금 정책대출을 타이트하게 하면 돼요. 이차보전 사업을 확 줄이면 여러가지 소득 요건도 낮추고 금리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책자금은 그런 성격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의 제한된 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저희가 일반예산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기금 사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7번, 저는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인데요.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몇 번 변경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정수호** 주택기금과장 정수호입니다.

열두 번 정도 변경했습니다.

○안태준 위원 저는 열한 번으로 아는데 열두 번입니까?

국회에 보고 몇 번 하셨어요, 혹시?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정수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딱히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어요.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 6번 7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금 다 변경해 가지고 꼭 무슨 썸짓돈 쓰듯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 의견 낸 거고요. 거의 삭감 의견, 전액 삭감은 아니지만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은 국토부의 정확한 약속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받아 놓고 기금운용 그냥 계획 변경해 가지고 여기저기 막 끌어다 당겨 써 버리니까, 최소한 이것은 우리 국토위에는 보고를 하고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변경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다 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분양주택(용자)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말 현재 한

60% 정도 됩니다.

○**안태준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실집행률이.

○**안태준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거 남아 가지고 다른 걸로 쓰셨지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이나 이런 데로 기금운용계획 변경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특히나 기금을 쓸 때 꼭 맞출 수는 없어요. 아까도 염태영 위원님 말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쓰겠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던데 다 좋은데요 반드시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 저는 이거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인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저희가 이따 부대의견 논의할 때 두 가지 사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 후에 변경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참 논의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선예산 후입법 관행을 고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2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안을 만들어서 부대의견에 담아 가지고 이따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안태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기금이든 예산이든 이걸 자의적으로 허투루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운용하다 보면 계획 변경은 다반사로 있는 것이고, 앞에 계신 손명수 차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지적들이 해마다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토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때마다 보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앞으로 얼마나 철저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나 국토위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고.

차관님, 이참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 때 장관님께서, 아마 이게 우리 국토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지금 기금 운용하고 똑같은 지적들이 각 상임위에서 계속 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관님께 보고하고 국무회의 때 안건으로 의제로 올리든지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은 한번 드려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소위원장 한준호** 어쨌든 이걸 위원님 또 주신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같이 안은 마련해서 이따가 올리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별다른 의견 더……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내가 편드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검토한다

든지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 정도로 하고.

○소위원장 한준호 문구 정도를 잘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류해 왔던 것들 38에서 42까지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40페이지의 7번 공공임대 용자 항목에 1000억 감액 요구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출자가 아닌 용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공공임대의 공공성 이런 부분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 이것은 민간에다가 용자하는 게 공공임대 사업의 목적에도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를 통해서 하든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공공임대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자를 통한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공공임대에는 용자사업이 있고 출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SH공사에서 하는 시프트 장기전세하고 또 하나는 뉴:홈에 있는 6년짜리 선택형, 6년 후에 분양전환 가능한 선택형 2개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둘 다 인기 좋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용자사업 1000억 원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SH 장기전세임대도 사실은 보면 중상위나 그래도 임대 중에는 상위 계층들이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그런 용자까지 해 주면서 민간에 이렇게 용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시프트는 85㎡까지 하지만 최근에 시프트는 청년 특히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근에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사실 SH공사는 현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최소한 정 부안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여쭙볼 텐데,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주택정비사업 이것도 용자사업인데 이게 아까 저희가 다루었던 사안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써 있기는 하지만 상위 7%의 우량 사업장 위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그래서 아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의견이 있으시길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대로 하시고.

48페이지인가요?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국토 분야는 일단 다 마무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건설정책국 소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건설사업종합정보망 사업 예산 45억 5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건설산업정보 통합 플랫폼 1차 구축 사업비 23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및 기존 정보화 사업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25년도 증액분 16억 41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6억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1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에 예산안의 50%인 71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과 아울러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사업 용역비 10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20%인 6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지반탐사 장비 구입·운영 및 위탁용역비 예산으로 1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23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지반탐사 위탁용역비 1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32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인데도 다양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 분야 각종 법정사무인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별점 정보 관리 등의 수행이 필요한 필수경비로 구성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법·불공정행위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보다는 오히려 정부안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비 23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해서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실시간 적발 가능한 기능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관련해서는 6억과 1억 원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제안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화(수주) 실적이 9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카인드(KIND)에 사업을 위탁하고 실적 제고 방안을 해 가지고 최근에 성과가 점점 도출되고 있고 조만간 7건의 추가 사업이 사업화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투자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고수익·고위험 사업화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걱정하고 FS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우크라이나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은 이미 23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용역비 9억 4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해서 용역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25년 추가 예산 투입 계획은 없습니다.

그다음 인프라 ODA 사업 중 인도네시아 이것은 예산 집행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89%고 연말 되면 97%까지 실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ODA 사업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같은 수원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산 변경은 수원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관련해서 지반탐사 인력·장비 관련해서 각각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은 탐사목표를 3200km에서 4064km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1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50페이지 7번,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도 사안이 다른 건가요? 13억 6000과……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3억 6000과 32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13억 6000만 원 증액 반영을 신청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키스콘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조금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용산과 관련해서 같이 뒤로 미뤄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이것 잠깐 보류로 좀 넘겨 놓고 나머지 먼저 의견을 주시지요.

49페이지부터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이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투입이 돼가지고 추가가 없는데, 그러면 10억 감액 의견이 잘못 나간 거라는 뜻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벌써 9억 4000 해서 23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11월에 끝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5년 추가 예산 투입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손명수 위원 그러면 이건 복기왕 의원님실에서 잘못 파악하고 감액 의견을 냈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이 돈이 FS 예산입니다. 그래서 FS 용역 10억 원 감액 의견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1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10억 감액 의견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러시아·우크라이나 키이우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은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금년 11월로 끝납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감액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오류라는 뜻인가요?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의원실에 한번 말씀을 좀 제대로 주세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행 해외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의원실에도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다 알고 계신데 그래도 금년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용역을 했으므로 내년도의 관련 예산을 깎겠다 그런 취지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준비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MP를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의견을 내신 사항입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데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이런 사업에 MP가 됐든 FS가 됐든 국토부는 이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종전된 다음에 시작하는 건 너무 경쟁국에 틀리고, 아마 처음에는 멀티개발은행 그런 데에서 자금으로 하는데 업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당장 우크라이나 재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개발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손명수 위원 실제로 과거에 이라크 재건사업할 때도 보면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1% 미만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몇십억도 사실 소중한 돈인데 생각 좀 해 보셨는가 내가 좀 궁금하네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해외건설이 최근에는 옛날같이 후진 입장에 있지 않고 국제개발은행에 상당히 많은 돈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렛대로 해서 사실은 사업화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고요. EDCF 관련해서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옛날같이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손명수 위원 글썄,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이렇게 전쟁 후의 재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주도로 될 가능성이 높는데 돈을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해외건설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4번, 카인드가 성과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

었는데 이것 감액 내용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딱 데 전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후에 책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것은 감액을 해도 이 사업 수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FS 사업이 그 해당 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요. 저희가 일단 내년까지 8건 정도가 될 것이고요. 설사 안 돼도 이 FS 조사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꼭 그 프로젝트가 안 돼도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한 제도나 공사 특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조사가 돼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 이유가 있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예산 회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돈 많으면 쓸모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된 성과도 안 되는 거고 정부에서 몇 가지 실패했던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복기왕 위원님 요구대로 한 10억 정도는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안태준 위원 저는 ODA.

○소위원장 한준호 예.

○안태준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4년 본예산에서,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ODA 사업이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89%입니다.

○안태준 위원 89%?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연말에 97% 예상됩니다.

○안태준 위원 올해는 꽤 높네요, 예년에는 한 80% 정도였는데. 저는 예년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보니까 계속사업이 13건, 신규가 5건, 총 18건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은 매년 사업 지연으로 계속 예산현액 대비 한 80% 미만만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그냥 감액 의견을 낸 거거든요, 한 20% 정도 감액을 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23년에는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7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집행률이 올라가 가지고 10월 말 현재 89%입니다. 연말까지 97% 돼서 거의 낙찰차액 정도만……

○안태준 위원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정부안 유지 정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67억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저는 올해 24년 예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얘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이 사업은 해당 국가에서 재무부를 통해서 프로포절(proposal)해서 돼야지 선정이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반영을 안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미 내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그다음 해를 줄여야지 내년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대로 복기왕 위원님 의견은 수용을 해서 10억 감액 이것은 정리를 한 거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리고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6억 증액.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은 16억 4000 증액이고요.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는 13억 6000 증액. 여기에 대해서 큰 의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53페이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연번 1번, 국토교통역량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대비 증액분인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는데 이걸 아마 제주도에 있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자료제출 미흡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AI 관련 과정을 추가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세요?

제가 여쭙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좀 체크를 해 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고 한다면 AI 관련된 교육을 추가시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AI 과정을 추가로 한 6개 과정 정도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6개 과정 정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액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부처에서 파악하기로는 뭐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것은 충분히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측



면을 반영한 것으로……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부대의견 두 가지는 준비가 혹시 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부대의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장님, 배부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사업인가 하면 결국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일단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소위원장 한준호 경기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보내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것은 보류를 해 났으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부대의견부터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 다 받으셨지요? 27·28 추가했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27·28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추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27번, 제가 한번 일독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이른바 선예산 후입법 관행을 지양하고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28번,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 당시 취지가 존중되고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한번 의견 먼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7번은 이견이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행정부 내에서……

○소위원장 한준호 28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행정부 내에서 동일 목이나 동일 사업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변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태준 위원님께 금년도 열두 번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할 때마다 사전에 선보고 후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에’라는 말은 빼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렇게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 의견을 좀 주시지요.

어떠십니까? 이 정도 괜찮으십니까?

○안태준 위원 예, 아까 위원님 취지대로 이게 사실은 국토교통부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의견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 정도로 수용을 하시고.

○김도읍 위원 아니 차관님, 차관님이 이 부대의견 자신 있어요?

○안태준 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김도읍 위원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국토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금과 기금 운용을 하는 전 부처에서 통일된 지침이나 이것을 마련해야지, 내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듣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텀링 오케이를 합니까?

자, 좋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국토부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장관님이 국무회의의 의제로 안건을 상정을 시키든지 해서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것을……

○손명수 위원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까지만 하면……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 보시지요. 기금운용안까지 들어가서 이게 집행 과정 이야기가 들어가면 전 부처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선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

○소위원장 한준호 이 정도까지로 끊어서 일단은 안을 좀 담아 놓으시지요. 이게 국토부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차원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7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나머지 부분입니다.

54페이지, 26개의 부대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정과 서면질의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그 워딩을 존중해서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26개의 부대의견 중에서 17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56페이

지 18번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고, 마지막 26번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수용된 안에 대해서는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일부수용, 18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 7번이……

○소위원장 한준호 7번이요? 수용한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일부수용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7번이 잘못된 거예요? 일부수용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방식을……

○소위원장 한준호 구두로 하지 마시고, 7번 일부수용이면 이거 문구로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신 다음에 설명을 주세요.

나머지 부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8번인데요.

‘노후 숙박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이후에 관계기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엄청 넓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가 중심이고 또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방재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내역사업의 실행이 부진하므로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한다’로 수정 제안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거 저도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이 부대의견의 취지는 집행실적 부진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종합검토 종합대책을 논의한 이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종합대책을 논의해서 발표한 다음에 각 부처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다른 거 먼저 보고를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마지막 26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부당이득 수취에 대한 청구소송이 종결되고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부영의 추가적인 기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을 짓다 보면 임차인과의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 건건마다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자칫 부당결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서 부영 등 거액여신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한도 설정, 공정률 및 임대료 점검 조치 등을 통해 대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그사이의 18번 이후의 일부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 취지인데……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보고를 다 받고 한 번에 토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18번 다음에 26번으로 바로 넘어가 가지고 19번도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26번을 이야기했다고?

○손명수 위원 예, 했어요.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18번부터 의견 개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명수 위원 19번부터 25번은 건너뛰었어요.

○정점식 위원 그래서 내가 중간 거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래서 계속 보고를……

○김도읍 위원 차관님, 26번은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수정안 이야기했으니까 그 수정안 가지고 한번 보시고……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일부수용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보고를 먼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8번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한준호 19번부터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9번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국토부 의견을 보면 광주역은 뺐는데 그러면 광주역을 넣어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손명수 위원 정준호 위원안대로 수용이에요?

○정준호 위원 아니, 광주역 부분을 빼기로 의원실하고 얘기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지요. 빼고 수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손명수 위원 20번.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0번은 법적 근거 미비와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위에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HUG는 공공주택 법령상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의견 낸 것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 유형2(매입형)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한다’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21번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굉장히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교통부는 24년 4월에 발표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등의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서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고요.

22번은 청년 버팀목 대출 관련해서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요건 완화 등으로 공급 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평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한 2%p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 평균 금리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에게 저금리 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로 바꾸자는 의견이고요.

23번은 신규택지 관련해서 '서울 등 수도권 외의 과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개발 치유와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수도권 다핵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부분은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5일에 발표한 서울 인근 5만 호 신규택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중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번, 착공 예정물량이 1만 1000호로 계획 대비 6%에 불과해서 현 정부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2024년 착공물량이 약 1만 호에 불과하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조속히 주택을 착공하여 현 정부 내에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입주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25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 확대와 지속 사업의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도입했던 점을 고려해서 국토부 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로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26번,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청구소송이 종결되고 이행되기 전까지는 부영의 추가적인 기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통상 기금 대출이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건설 후에 임차인과의 소송을 근거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어떤 부당결부의 원칙 등에 위배돼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부영 등 거액여신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한도 설정, 공정률 및 임대료 점검 조치 등을 통해 대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18번부터 26번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번·26번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용이 달리 분리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일단 4번·26번은 통합을 해야 돼요. 하나의 부대의견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차관님, 부영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깐 '그러면 민간임대주택 사업 우리 곤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말을 안 해요.

아니, 부영 같은 저런 기업에 국민 돈을 계속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당결부 원칙이 됩니까? 차관님, 부당결부 원칙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임차인하고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김도읍 위원 소송을 한다는 이유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일부가 나왔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국민 돈으로 이런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분양전환대금을 부풀려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기업에게 주택도시기금을 계속 지원한다? 대출한다? 그게 부당결부 원칙에 반한다?

부당결부 원칙이 됩니까, 차관님? 설명하세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안 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요. 그러면서 중국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민간임대주택 우리 못 합니다’, 배짱 아닌 배짱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해서 수십 년간 이러한 현상을 알면서도, HUG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것을 눈감아 주면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차관님 억울합니까? 왜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부영에 대해서는 거액여신 관리업체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관리하는데 이 모양입니까? 분양전환대금도 그렇지요. 하자 보수도 그렇지요. 그때 사례를 들었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부영이 제가 알기로 23만 호인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했고 분양전환한 것 빼고 나면 지금 한 9만 호 정도가 임대 상태일 거예요. 하자 보수 건만 해도 9만 호에 한 가구당 인구를 3명씩 치면 27만 명이 하자 보수 관련해서 고통을 받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추가 대출을 제한하면 뭐라고요, 부당결부 원칙? 그런데 차관님은 부당결부 원칙이 뭔지 왜 설명을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제가……

○김도읍 위원 실장님, 일단 가만 계십시오.

차관님, 예산 심사 받으러 오면서 이렇게 대안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그러면, 저는 처음 듣거든요. 부당결부 원칙에 대해서 차관님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소송을 근거로 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데 소송을 근거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결부 원칙에 반한데 위배한다는 건데 부당결부 원칙이 됩니까, 개념이 뭐예요? 왜 이럽니까?

그래서 제가 4번·26번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일단은 ‘하자 보수에 있어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4번·26번

통합을 하면서 지금 국토부 의견을 넣고 ‘하자 보수에 있어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은 국토부가 실장님하고도 조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백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부당결부 원칙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는데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이 회의를 마냥 끝 수는 없잖아요. 마냥 끝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부대의견이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국토부 의견대로 ‘철저히 관리한다’로 정리를 합시다. 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사이에 ‘하자 보수(원상 복구)에 있어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 문구도 넣어 가지고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좀……

○소위원장 한준호 예, 그러시지요. 작성을 해서 공유해 주세요.

○손명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4번·26번은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3번 부대의견은 이게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아예 부대의견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

○김도읍 위원 13번?

○손명수 위원 예, 방음매트.

○소위원장 한준호 13번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손명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번하고 26번을 통합하면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대의견에서 특정 기업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거액여신업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특정 기업명을, 김도읍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내가 처음 봐 가지고 한번 알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어쨌든 부대의견 전체 확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 소위 책임이 좀 있으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민간업체들이 20년간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한 것 전체의 23%를 부영 기업이 혼자서 가져갔어요. 이것은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수정의견으로 부영 등 거액여신업체……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 23% 같으면 이것은 엄청나고, 나는 부영은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영을 뺀다면 절대로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은 해 보세요.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는 확인은 꼭 해 보시고 4번·26번에 대한 통합 의견을……

○김도읍 위원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부영을 왜 못 넣습니까? 그냥 시중은행에서 5% 7% 대출받아서 본인들 자금으로 사업하면 제가 왜 이릅니까?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 그래도 어쨌든 국토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 소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4번·26번 통합할 때 같이 의견을 주시도록 하고.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소위원장 한준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18번 관련해서인데 건축물관리법 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숙박시설이 꼭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하고 시행령하고 일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지요.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건축물관리법상으로 분명히 숙박시설이 담겨 있는데 시행령으로 넘어와서는 숙박시설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범위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을 근거로 하는 상임위 내에서 시행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숙박시설은 법에는 들어가 있고요. 시행령에는……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 법에는 언제 담긴 거고 시행령은 언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 자료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숙박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해서 시행령에는 고시원은 들어가게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숙박시설이 크게 전체 차원에서 일단 들어가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그 규모를 좀 좁혀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데 문제가 부천 같은 사례처럼 이런 숙박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니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안에 담고자 하는 것인데 국토부가 준 의견 가지고는 그것이 전혀 담기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조금 전에 차관이 답변드렸듯이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범부처 차원에서 행안부 소방방재청 국토부 등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데 이것은 예산 사안과 관련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니까, 건축물관리법에 담겨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다 제외를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제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쳐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숙박시설에 대해 국토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고동진 의원님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소방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실장님, 그런데 2020년 3월 5일 자 기사를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2020년 그해 5월에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리한 시행령·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고 입법예고한 데 보니까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검토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쏙 빼고 하니까 이 범주 내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부대의견에 달아 달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입법예고했던 사안대로 노후 숙박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라,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라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부처 차원에서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부처 간에 왜 논의가 되고 있는가 하면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규모가 추정컨대 한 30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더라도 인명 피해를 10명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래서 재정 당국과 방재청 국토부 같이 합동 TF를 꾸려서 어디 법에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 18번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명확히 이해를 하셨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소위원장 한준호** 4번·26번 통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 좀 주시도록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23번 24번을 다시 저희한테 보내 오셨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7번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관련인데요. 지원 방식을 기존 정책 지원에서 정률 지원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한준호** 협의하겠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래서 ‘국비 지원 방식을 기존 정책에서 정률 지원으로 변경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건 바이 건으로 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23번.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3번은 부동산시장 자극 우려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상쇄하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도권의 다핵화라든지 또 서울 집중 완화라든지 또 난개발 치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은 ‘24년 11월 5일에 발표한 서울 인근 5만 호 신규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중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안태준 위원님 안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안태준 위원 제 것을 계속 읽는 거예요. 아까도 제 것을 읽었어요.

○소위원장 한준호 하나 달라졌어요, 하나 달라졌어. '마련하며'가 '마련하여'로 바뀌었어요. 그것 하나 바뀐 건데?

○안태준 위원 아니, 아까도 내 것을 읽던데 그냥 봐둔 거라고. 그 아래 것을 읽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 이대로 가는 것 맞습니까? 이것 명확히 해 주세요. 수용이네요. 지금 국토부가 준 자료대로 하면 안태준 위원님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과밀화'를 '수도권 집중 우려'로 이것 하나 달라진 거예요? '과밀화' 부분이 '수도권 집중 우려' 이것으로 바뀐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표현을 바꾼 건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수도권 집중 우려'로 바꾼 겁니다. '과밀화 상쇄'를 '수도권 집중 우려 완화'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안태준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24번,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기 신도시는 착공 예정물량이 1만 1000호로 계획 대비 6%에 불과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2024년 착공물량이 약 1만 호에 불과하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조속히 주택을 착공해서 현 정부 내에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입주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한준호 이게 27년도를 약정하는 걸 빼냈네요? 27년이 어려운가 보지요?

○정점식 위원 그걸 '현 정부 내에'로 바꾼 것 같은데요.

○염태영 위원 가만히 보니까 국토부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뭔가 여유를 주려고 한 걸 좀 더 구속적으로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소위원장 한준호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 보셔야지. 27년과 이게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김도읍 위원 원래 부대의견은 '강구한다' 이런 결론이 주로인데.

○소위원장 한준호 큰 의견 없으시지요?

차관님,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심사는……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개별 기업 이름 들어가는 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법

이 있어요? 법 없으면 넣어야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그런데 부영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부당이득과 관련된 소송이 한 100여 건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에요, 218건인가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 분쟁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소송하고 부대의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대출 현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하는 건데 소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소위원장 한준호 이 부분 잠깐 정회했다가,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잠시만요.

제 생각에 저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아직 채택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산과 별도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것도 하지만 결국 부대의견을 내가 넣는 것은 지금 기금예산 운용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넣어 줘야 돼요.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이것 보류해 놓고, 이 부분에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석님, 설명을 해 보세요.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하고, 그러면 이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영 등 거액여신업체에 대해서 신규 대출 한도 설정 등 관리한다 여기에……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정부도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는 수정의견……

○김도읍 위원 수석님, 그 이야기한 근거가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다들 부영에 우호적인지 모르겠네.

○소위원장 한준호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보류사업을 제외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국토 소관 보류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행복청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료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과 아울러 13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행복청에서는 13억 37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 별도의 심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번 4번,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건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본조사설계비 등 27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연번 5번,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된 입찰공고 유찰로 인하여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까지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98억 65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 98억 6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되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한 일반연구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97억 65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6번,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동 병원 건립으로 발생하는 차입원금 상환 지원을 위해서 299억 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6페이지……

○염태영 위원 회의 진행 과정상 다들 수용은 이견이 없는 거니까 그냥 특별히 보고 안 하는 건 어떨까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1·2번은 수용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지 말라는 취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번 8번, 부강역과 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잔여 설계비 25억 원 신규 증액 의견과 아울러 19억 400만 원 신규 의견이 함께 동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9번,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관련해서는 기본 설계비 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과 함께 1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청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행복청 차장 강주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몇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은 정부안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회 협의하는 동안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은 두 가지 안 중에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평동종합체육시설의 경우에 내년도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한 일반연구비 1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6번과 관련해서는 세종충남대병원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복도시법상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두 가지 안 중에 25억을 증액해 달라는 안이 반영되었으면 한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번도 20억 증액안과 15억 증액안이 있는데 20억 증액안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해서 정상 추진 중이다 이게 합의하는 게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해소가 된다, 예산 불용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차장님께서 자신하시는 거예요? 예산 소화 다 가능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예, 소화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예 건립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확정된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일반연구비 1억 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종합체육시설을 다시 기획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원래 목적이었던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종합시설 이것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당초 목적대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소위원장 한준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다시 연구용역을 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손명수 위원 저 질문 있어요, 진짜 질문.

4번 대통령 집무실, 원래 우리가 수도 이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관습헌법에 막혀 가지고 사실 대통령실을 못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집무실은 건립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제2집무실은 위험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손명수 위원** 엑스트라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강주엽**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다.

○**손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냈던 의견 4번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새만금개발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1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51억 2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51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연번 4번,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로드맵 수립 예산 6억 11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6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4페이지에 부대의견 1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와 계속된 입찰공고 유찰로 인하여 지연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일정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정리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 새만금청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새만금개발사업이 동서남북도로 개통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공항을 착공하게 되고 인입철도도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새만금 신항만 2선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증액 예산……

○**소위원장 한준호** 짧게 그러면 제가, 일단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은 51억 2300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리고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해서는 6억 11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잠시 자리 정돈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보류사업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류사업들을 논의할 때 소위에서 다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상임위로 넘겨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은 충분하게 남기시도록 하고요.

보류사업들은 별도로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류사업들만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할 텐데요. 수석전문께서는 보류사업들 보고를 해 주시고 정부 측 입장을 주신 다음에, 우선 3페이지하고 그리고 9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 이 3개는 저희가 나머지 분야 논의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가 다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류사업만 추려 놓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4개는 전부 다 보류로 지정돼 있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정부 측 의견은 이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별도로 입장 주실 것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닙니다. 다 정부안 유지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4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저는 국교펀드 이것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글로벌인프라펀드에서 청산 또는 해지한 1·2·5호 상세 내역 달라고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왜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까?

담당 과장님 와 계세요?

지금 전용기 위원님 말씀은 국토교통혁신펀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토부 측에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용기 위원** 청산·해지했던 1·2·5호 펀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담당 과장인데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차관님, 4번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 있잖아요. 소속기관의 직원들 중에서 관사에 못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임차해서 하는 직원들도 꽤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 통계를 좀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기표 위원님이 여기 소위에 안 들어오셔서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제가 국토부 펀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도 지방청 근무를 해 본 입장에서, 지방청 직원들이 자기 근거지를 떠나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숫자보다도 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 보고인데 그 숫자를 제대로 내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김기표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기표 위원님이 LH 공가 등을 활용해라 이런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방청장 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아예 관사가 없어 가지고 세를 얻어서 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이것은 김기표 위원께서 의견 대신 대로 LH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LH가 저희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LH 공가를 국방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국토부가 이용하기는 좀 어렵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래서 LH 직원들조차도 LH 공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은 동의들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에 대해서만 우선 자료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전용기 위원께서 받아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4페이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으신 후에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조경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동 포럼 내용과 같이 유사 지원 사례가 있는지 보고를 받으신 후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정부 의견은 아까 다 받아 보셨으니까, 혹시 정부 의견 주신 것과 달리 변한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점심시간에 스마트시티 확산사업과 각종 포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연번 8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에서 50% 정도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염태영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100억 증액 그대로 수용하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한준호 위원님이 스마트시티……

○소위원장 한준호 저만 의견 드리면 될까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보면 24년 내 SPC 설립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도시경제과장 운영중입니다.

SPC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SPC를 꾸미는 건데요. 지금 관측에는 K-water(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K-water(수자원공사)가 다음 주에 이사회 결의를 거칠 거고요. 그래서 민관 간에 사업시행합의서를……

○소위원장 한준호 이사회가 11월 19일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사회 확정이 됐어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그리고 11월 말에 민관 사업시행합의서를 한 다음에 12월 중에 SPC 법인 설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12월 내예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의견을 받고 가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 운영중 예.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소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조경산업 활성화 보고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실장입니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포럼사업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조경포럼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걸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민관에서 공동 운영을 하고, 각종 조경계 전문가로 합동 구성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그런 포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게 2억 5000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포럼 관련된 것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김희정 위원 차관님, 2억 5000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정부에 없던 것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항목이 지금 2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각각 얼마고 뭘지 얘기를 해야지 신규사업인데 그냥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인가요?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포럼에 대한 소요 예산이 8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21년 전까지는 조달청에서 조경수에 대해서 가격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이후에 조경수목의 적정가격이 없어 가지고 조경산업계에서 피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경수의 가격조사 기준과 가격조사 공표 등을 위한 용역을 하는 예산이 1억 7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74년부터 약 30년 이상 조달청에서 하다가 멈춘 이유는 뭐고 그 예산이 조달청이 아니고 국토부로 온 이유는 뭘니까?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지속적으로 조경수 가격고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하고 2001년부터 이 업무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에서 직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조달청에서 중단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들이 3년 동안은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하지를 못 했었는데 그 3년 기간은 이전에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전에 고시된 것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그냥 정책연구용역으로 시범적으로 조경수 고시단가를 조사하고 있고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부족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희정 위원** 다음, 포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포럼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조경진흥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로서 조경산업을 진흥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경포럼을 통해서 민관학 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조경산업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상충 아닙니까? 조달청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왔고 결국은 조경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시할 때 적정하게 잘해야만 국민이 피해를 안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게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즈음에 조경포럼을 국토부 예산으로 한다? 이익단체와 이해관계가 대립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적정한 가격을 정해야 하는 용역을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그 이익단체를 위해서 포럼 개최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개최비를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도읍 위원** 아니, 포럼을 하는데 결국은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새로 단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의견을 낼 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규합을 할 수 있도록 토론 개최비를 지원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장구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가 돼서……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이 사업의 주목적은 저희가 중단된 조경산업의, 조경수의 적정 거래가격을 공표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것은 1억 7000만 원 하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내역사업의 하나가 포럼 개최비용 8000만 원 들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조정하세요. 그렇게 조정해서 하면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개최비용 8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포럼 개최비용 8000 빼고.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면 1억 7000은 살리고 8000 빼고 이런 것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건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대부분 증액이나 감액을 할 때는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증액, 무슨 무슨 항목 때문에 감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실도 같이 들으세요. 본예산이나 정부 예산 안에 전혀 없던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조사 공표(1억 7000), 포럼 개최(8000)’ 이 정도로 왔어도 사실은 문제되는 문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쳐서 ‘맹성규 위원 2억 5000 증액’ 그런 식으로 보고서 만들어 오니까 문제 삼는 거라고요.

그리고 문제 삼으니까 아까 ‘포럼 이런 거 연 적 없습니다’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그리고

2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비용인 1억 7000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게 원래 조달청 사업이었는데 뭘지 등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 안 했잖아요.

○소위원장 한준호 잠깐, 제가 다시 여쭙볼게요.

지금 조정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단체에 이익을 주는 사업입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닙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맹성규 위원장의 사업에 대해서 뭔가 특정되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사업내역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특정 사업들도 아닌데. 지금 맹성규 위원장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전에도 국토교통위원장들이나 여기 또 위원장 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위원장실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업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정부나 행정부의 업무보고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 지적들은 충분히 의견 남기시면 됩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포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분야별 정책연구포럼 운영비 등을 통해서 이 분야가 더 우세하면 당연히 이 분야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분야가 필요하면 다른 분야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딱 오비이락식으로 조사와 아울러서 포럼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형태로 들어와 있는 형태가 그다지 좋은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 정부 요청 사업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요청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맹성규 위원장이 요청한 사업이 아니에요. 정부 요청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증액을 해야 되고 왜 감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들이 저희가 볼 때는 하나하나 의견들을 다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고, 하나 넘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용산공원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받아 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1억 7000만 원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7000 제외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다음은 5페이지 연번 10번, 건축안전 관련된 사항으로 내역사업 두 가지입니다. 건축자재통합플랫폼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입장 변화 없다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다음은 6페이지에 연번 17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18번, 도시재생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수용곤란에서 위원님들 요구액의 30%만 반영한 일부수용 의견으로 변환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감안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고령의 좌학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는 수용불가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광역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부산 이런 데서 각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그것을 저희가 1차 평가 2차 평가 실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주민들의 편의시설 302억은 경기도에서 원래 64건을 신청했었어요, 국토부에. 64건을 신청했는데 31건이 탈락됐습니다. 그 31건 탈락된 것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경북 고령군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도 경북에서 10건을 신청했는데 8건이 되고 2건이 떨어졌습니다. 그 2건 중에 1건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 탈락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앞에도 있던 창원

의창구에 있는 동읍 덕선주차장의 파크골프장도 다 이렇게 됩니다.

○**김도읍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차관님께서 금방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수혜자가……

○**김희정 위원** 맞아. 그린벨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손명수 위원** 저는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세 지원 정책은 이제 재검토하고 그 재원을 월세 지원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세에 대한 지원 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꼬인 거예요. 전세는 목돈이잖아요. 목돈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자꾸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지금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 지원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거 지원 정책은 월세 위주로 가야 된다, 그것 지금 재검토해 주세요.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방금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성은 저희 국토부에서도 100% 동감하고 당연히 월세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환보증 제도 자체가 초기 2013년도 설계되고 할 당시에는 90%대 그리고 비아파트 경우는 70%대 이 정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강통전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2017년 2018년 때는 거의 100%가 됐습니다. 100%가 되니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집주인은 무자본으로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또 HUG 대위변제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하여튼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때 이후로 전세사기 문제 해소 그리고 대위변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로 강화하면서, 90%로 강화해 보니까 사실 90%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

됩니다. 전체 사고 건수 중에 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20%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사실 제도라고 하는 게 100%까지 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10~20% 사고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이 제도가 서민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는, 같이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유형 장기임대 제도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월세 형태로 시장이 개편되고 나면 당연히 이 보증 제도는 필요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제도인데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서민들도 보호하고 어느 정도 보증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보증 요건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손명수 위원**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바쁘신데 죄송한데. 지금 100%에서 90%로 낮춘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그것 봐야 돼요. 그 효과는 내가 볼 때 적어도 내년 이맘때쯤 가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속단하기 일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세라는 목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물론 전세가 월세하고 그냥 비교하면 약간 유리해요. 약간 유리한데 그 유리함을 택할 사람들이 목돈도 있는 사람들이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 리스크를 헤지해 주니까 이게 시장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지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보이는 그런 트렌드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지원하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보증도 심지어는 임차인이 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고 생기면 대신 물어 주도록 보증을 들어야지 왜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사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된 거예요. 임대인은 아무 부담이 없어. 이게 무슨 제도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돈이면 뭐 그렇다 치겠어요. 1년에 수조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 그 돈이면 몇만 채를 지어서 정말 월세 저렴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지원이지 왜 이렇게 엉뚱하게 돈이 새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그게 지원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들어. 이것은 아니지요.

저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도 지적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국토부가.

○**소위원장 한준호** 의견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전세 반환보증 제도를 현행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그 부분은 별도 별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세 반환보증 제도가 과연 필요하냐, 이게 오히려 우리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건이고, 엄연히 지금 전세가 살아 있고 또 전세사기 이후에 누구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다 들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손명수 위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보증료를 내고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맞지요. 왜 이것을 임차인에게 하게 하고 그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하느냐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해서 보증료 지원은 저도 감액 의견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도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손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은 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실장님이나 차관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안에서 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 향후에 이 재원을 배분할 때 정부의 정책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염태영 위원** 사실은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전세제도가 갖고 있는 특이한 점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줄여 가야 된다는 점 이런 취지의 손명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없어진다고 그럴 때 시장의 왜곡과 혼란은 또 상당할 거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서 차츰 없애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해 놓고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일 정조회의가 또 있잖아요.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전체회의로 넘기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에 수용곤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류사업 자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으로 입장을 변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수용으로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여러 가지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 감안할 때 저희가 이 사업은 접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쟁점사항만 남았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우선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3페이지의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그리고 부대의견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3페이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 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입장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주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정부 의견은 다 받았으니까요.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페이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5년 총사업비 47억 9000만 원 중에 45억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23억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16억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운영비 직접경비, 차관님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앞서가시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47억 중에 45억을 감액을 하면 2억 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직접경비 이런 것 하나도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올 스톱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지금 16억 감액 의견도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이랬는데 16억도, 여기에는 아까 말한 운영비 직접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이런 상황에서 16억을 하는데 문제는 한준호 위원장께서 건설산업정보 통합플랫폼 1차 구축비 23억을 다 들어내자, 이것은 기존의 운영비 직접경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다 들어가요.

1차 구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니까, 23억을 이번에 넣어야 되는 이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신규사업으로……

○김도읍 위원 담당 과장님.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통합플랫폼 1차 구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현재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점검해서 저희가 통보를 연 한 2만 건 3만 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사명이나 그런 것들을 수기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들을 어떤 분류나 그런 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 있어서 한 40만 건을 계속 분류하는 데 한 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코딩화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으로 23억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도읍 위원 예산서를 보면 필요성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산업 생애주기별로 공공·민간 부문 각 시스템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생성 중. 연간 신규 건설공사 100만 건 이상이나 현재 건설 관련 데이터는 불법행위 추출 등 목적에 따라 일부만 연계되어

있고 통합적인 연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돼 있어요. 이것을 구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들이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엑셀 같은 것을 메일로 받아서 직원들이 밤새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불법·불공정행위를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를 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한준호 위원장님께서서는 신규사업 23억 1500만 원을 다 들어내자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다 존중하지만 결국 1차 구축비 이것은 직접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안 자체가 직접비 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대부분이 전년 비해서 감액돼 왔다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결국 문제는 23억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거든요.

과장님, 왜 필요한지 위원장님께 설명을 잘하세요. 안 하렵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건설업체에서도 연간 240만 건의 건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마다 다 각자 입력을 해야 돼서 중복 입력 때문에, 건설업체를 설문조사했더니 한 40%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규제 완화의 필요가 있었고요.

○김도읍 위원 과장님, 한준호 위원장께서 이 구축비를 다 들어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라도 ‘위원장님, 이것은 이만 이만해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예, 저희가 한 번 가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께 드렸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이익진 그런데 위원님께서서는 안 계시고 저희가 관련 보좌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뜻과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지금 이게 사업 수혜자라는 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등록하고 행정처분하는 기관이지요. 그리고 건설업체 그다음에 공공·민간 발주자 그리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들 중에는 또 일반 국민들이 다 포함돼 있고, 수혜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사업대로 좀 진행시켜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질타하실 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증개축 관련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것은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해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은 정부 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결자해지는 하셔야 된다고 봐서 기존 정보화 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5년도 증액분만큼 감액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 소위 관저 증축공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안 했더라는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제출을 못 한 사유가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저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종합정보망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 내에서의 자료제출 제한 사유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질책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키스콘 관련해 가지고 정보가 다 전산에 입력이 돼 있고 국토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열람이 안 되냐 왜 자료제출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방금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시설이고 그런 법령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 봤지만 사법정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은 다 전산 열람은 안 되지만 재판의 진행 일자라든지 서류접수 내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오픈이 되고 이것은 지금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키스콘에서도 만약에 가급 중요보안시설이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기록을 이관을 시키든지 자료를 이관시키든지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열람 가능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시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감 받을 때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복만 하고.

그러면 보안시설인지 아닌지 자료제출이 허용이 되고 안 되는지는 국토부 내부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자료 제공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보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협조를 못 한 부분이고요.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을 일반 정보랑 별도로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했고요.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것을 하드웨어만 구축하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까지 공개할지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원 정도 들이면 그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자료제출 안 되면서 국감 파행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저희가 그냥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 국감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감했던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설산업정보원은 사실 이 건과 무관하게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까 수혜자들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되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방향과 맞고 이래야지만 실시간으로 불법 같은 것들을 잘 잡아낼 수 있어서 수혜자가 훨씬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키스콘 통해 가지고 관저 관련해서 했던 게 착공 허가 전에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사실 그런 것은 저희 정보가 아니고 세움터 정보입니다. 착공 여부는 저희가 하는 것……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키스콘에서 열람이 되는데 저희가 한 몇 주를 걸려 가지고 다른 루트로 자료 겨우 받아 내고 받아 내고 지금 이런 경우인데 왜 그런 에너지 낭비를 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키스콘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잠깐만요.

감사원에는 자료제출하셨지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요. 감사원에는 자료제출하셨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런데 같은 감사기관인 우리 국토위에는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여러 가지 고려가 좀 됐는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가 여러분께서 정치를 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그런 경우도 정보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뽑아낼 수 없는 자료는 아닌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관저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벌어진 건설산업법 위반이나 건설법 이것 상시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데 이 위반 사안들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저희가 그것을 답변하기도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소위원장 한준호 아니, 그것을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 안 되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배정을 하겠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사 규모를 갖고 있는 거지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차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 자체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담기 위해서는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건설산업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했느냐, 모니터링이 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모니터링이 됐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저희가 한 해에 한 3만 건 정도 적발을 하는데요. 지금 이 건은 계약서하고 건설정보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됐던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가 3만 건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아니, 제가 데이콤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DB 관리자 출신이고. 직접 제가 코딩을 해 본 사람이에요. 이것을 락을 걸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 난이 필요한데 제가 들어간 키스콘 입력창에는 별도로 락을 걸 수 있는 난이 없어요. 그러면 하드코딩을 해야 돼요. 직접 들어가서 코딩을 해 가지고 그것 잠가야 돼요. 그 DB만 그 셀렉만 딱 잠가야 돼요. 그런데 키스콘에는 그런 입력장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뵙으면 다 보이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맞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제가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도 다 하고 있는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망 간에 상호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감사원 측에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하시고 감사기관인 국토위, 즉 국회에는 선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건설산업법이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만일 정말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미 점검이 돼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만일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을 태워 가지고 이것을 구축할 일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는 겁니다. 즉 제가 감액 요청을 드린 것처럼 플랫폼 1차 구축 사업비를 태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내부

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구축돼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태우자, 예산을 더 달라라고 하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하면서 국토부가 과거 메이킹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 교통에서 다루게 될 텐데 화물운송사업자 시스템이 다 분리돼 있는 것을 같이 가자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통신망에 있어서도 현재 단선망에 의한 프리퀀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다 LTE 방식으로 바꾸는 것하고 이것도 연장선상입니다.

저는 국토부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의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현재 다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꿰어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를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가가 만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키스콘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협회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도 있고 또 지자체도 여기에 같이 등록해서 법정 사무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 사업과 그리고 정부의 이런 자료제출의 미흡함이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을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비슷한 논지인데요. 자료제출 불가라는 게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제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책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플랫폼 1차 구축 사업 이걸 하면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예요? 최종적인 수혜자는 건설업자든지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발주처, 국민들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민들께서 손해를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 필요하면 공무원 징계를 먹이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건 취하더라도 이 수혜자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 주는 게 안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 요청하지 않았던 공무원 전원 그 사람들 다 징계 현황 가지고 오면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감액안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려면, 작년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용역사업 18억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인데 여기에 최소 공무원 4명 정도가 징계를 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이걸 추가적으로 증축하겠다는 그리고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고 가려면 적어도 현재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러려면 답변 중에 그 관련된 증축 사업에 불법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인지했느냐에 대해서 명

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차관님이든 실장님이든 답을 못 해요, 답해서 기록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이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을 통합구축 사업으로 더 연계해 가겠다 이런 주장이 명분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축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업비를 태울 수가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저희가……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또 민주당 위원님들, 서두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질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국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게 있고 나무랄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지금 이 예산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면 이게 건설산업 생애주기 별로 새로운 공사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겠지요.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2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정치적으로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하고, 아까 정준호 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뭐 말씀 안 하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정준호 위원 했어요.

○김도읍 위원 제가 잠시 또 화장실 갔어요.

47억 중에 대부분이,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예산 설명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직접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다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한준호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23억 플랫폼 구축비 신규사업 이걸 넣느냐 마느냐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전체회의로 보류하시면서……

차관님, 내가 봐도 통합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요. 이 설명이 네이밍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재나 공법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시스템에서. 맞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14개 독립된 시스템들이 각각 입력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키스콘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14개를 사업명도 똑같이 쓰고 중복 입력 없애고 데이터 간 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자는 게 취지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나는 조금 섭섭한 게 한 번 뵈러 갔는데 위원장님 안 계시고 보좌관님한테 설명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마치고 나면, 받아 주시고 안 받아 주시고는 위원장님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한준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국감을 보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 시기니까 제가 운영비를 깎자, 유지보수하는 걸 깎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못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견 주신 대로 이것은 전체회의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 증액분은 어떤 것 증액분이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똑같은 사업을……

○**안태준 위원** 아니아니, 지금 플랫폼 1차 구축 사업비 말고 제가 감액 요구한, 이번에 24년 본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요구가 됐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만큼 증액을 하신 거냐고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기존 예산이 7억이 줄고 23억이 늘어서 16억이 증액된 겁니다.

○**안태준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전체회의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인가요?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제가 처음 어린이정원 관련된 것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포털에 검색해 보면 어린이정원 관련해서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성한 사업 용산어린이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받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도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400억씩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수용 못 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입장이 특별히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일단 의견 들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내용의 부적합 위법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특히 올해 국토부 예산이 작년보다도 2조 줄었어요. 특히 SOC 사업이 많이 깎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도로 SOC 다 지금 아우성이예요. 저는 이 돈 삭감해서 그런 데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용산공원 집행도 잘 안 될 테고 집행해 봐야 정치적 이슈만 생기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대로 지방의 SOC 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도 감사 회피 시도가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입장 마찬가지로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시 사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임시 사업시설을 언제까지 임시로만 계속할 것인지 저는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 또한 정치적 판단으로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내용 다 했다고 하던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



로 지적됐던 것이 올바르게 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것을 임시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의 사업을 400억씩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지금 계속 용산공원 정비계획 이 부분이 임시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임시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결국은 공여지가 빨리 반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공여지 전체가 반환되는 걸, 지금 현재 삼십몇 퍼센트 정도 반환됐나요, 용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2003년 결정 이후에 지금 31% 반환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31% 정도 했고 그러면 나머지 69% 정도는 언제쯤 반환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것은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 반환 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 반환 협상은 우리 정부 내에서는 제일 위에는 NSC가 있고요. 그 밑에 국방부 외교부 또 환경 관련된 환경부 등이 참여해서 그 반환 협상을 하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반환을 받으면 그때서야 국토부는 반환받은 땅에 대해서 반환부지 활용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결국은 임시 사업시설로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 한미 간의 협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예를 들자면 3년 이내에 모두가 다 반환이 완료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한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시 사업시설 또는 환경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 전체를 삭감을 한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길게는 몇십 년 또는 짧게는 몇 년 동안 용산공원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삭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차관님 하나만 짧게 좀 여쭙보면, 공원계획 수립해서 정식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임시 시설들은 다 헐어 내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월셋집에다가 수익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사업을 굳이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1% 반환받는 데 20년이 걸렸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공원의 반환 부분 임시 개방 결정은……

○소위원장 한준호 현재 상태로 놔두게 되면, 그 공원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계속 관리를 해 줘야 가능한 거지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니까 계속 관리는 어쨌든 공원이니까 하는 건데 시설을 더 넣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뛰놀거나 다니거나 이 자체를 아예 못 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게 되면,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소위 말하는 환경정비……

○소위원장 한준호 시설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시설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공원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설계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다 뜯어내야 되는 완전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까지 임시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한 임시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공원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다니고 뛰고 앉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환을 받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미군이 활용하다가 비워진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 시설을 그냥 두지 말고 개방을 하자, 그냥 개방을 할 수 없는 게 환경적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적으로 문제없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성 위해 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개방을 하자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게 미군이 쓸 때는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냥 방치를 하면 구조물이 상당히 손상이 되고 방치가 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둘 거냐 아니면 임시라도 일부 개선을 해서 개방을 할 거냐 그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장교숙소 5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츠타운을 활용하자라고 그 이후에 지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위해성 저감조치를 해서 지금 야구장, 축구장, 어린이를 위한 테니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 과거에 미군이 쓰던 여러 가지 집들 같은 게, 관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무너지지 않게 조치를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를 조금 활용해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태준 위원 궁금한 것 있어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안태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정부가 예상하는 내후년도 예산은 어때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반환을 받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새 정부가 시작했을 때 그때 반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60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미 협상이 그렇게 빨리 진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

가 반환받은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한 400억씩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러니까 이 물량 중에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마 점차 줄지 않을까요.

○**안태준 위원** 그건 지금 얼마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될 뻔 얼마, 될 뻔 얼마 해도 최소 한 380억, 345억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닙니다. 건축 리모델링이 2개가 있는데 27억과 52억이 있습니다. 2개 합치면 79억입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340억 이상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크게……

○**안태준 위원** 아니 말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쥐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 보시라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들어가면 얼마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환받아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기왕 이렇게 사업도 해 봤으니까 이걸 좀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끝납니다’ 이것도 없잖아요.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어린이정원이 있고요. 장교숙소 5단지가 있고 지금 저희가 반환을 받았는데 아직 개방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9억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정원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이 한 194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장교숙소 5단지가 19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반환을 받았는데 아직 개방을 하지 않은 부지에 위해성 저감조치나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한 186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를 한다면 좀 전에 차관이 얘기한 내년도의 어린이정원의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이 27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반환을 받았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한 52억 원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게 한 79억 원이, 사실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안태준 위원** 길어지니까 끊고, 아마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상임위 때도 계속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위해성 저감조치 같은 경우에 이것 실태조사 해 보고 막상, 이것 유적지 같은 거예요. 위해성 저감조치는 조사를 해 보면 몇 년을 해도 안 끝나는 수가 있어요. 의정부가 그래요. 반환받은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토양오염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것을 개방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정원을 꾸미겠다고 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합계획 자체가 없다고요.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저도 그러면……

○소위원장 **한준호** 의견 주실 것 마저 다 주십시오.

○염태영 **위원** 사실은 오늘 이 얘기 가지고 길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는데 전체회의로 넘길 때 지금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되는데, 실제로 공원 조성 전체에 대한 플랜을 우리가 우선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은 수십억 이내지 수백억 이상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확정하기 어려운 예산이 토양오염 제거비입니다. 이걸 수백억이 들지 수천억이 들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산공원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언제까지 반환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토양오염 제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까지 나갈지를 보고서, 우리가 최소한 인정하려면 ‘이번엔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지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는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가 가능하려면 전체적인 플랜을 알아야 되니까 다음번에 본회의하기 전에 그것을 꼭 좀 받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언제 완료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하게 반환받은 부분에 대한 운영 목표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당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뻑니다’.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정부와 상관없이, 이 공원이 국민들에게 개방이 돼야 되고 활용되어야 된다는 목표는 정권과 상관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환된 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가 그 나머지 땅에 대한 반환을 앞당기는 데 분명히 좋은 역할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모든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정말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정부로부터 받은 보고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든지 없든지 통상적으로 공원이냐 정원 관리를 넓이의 비용에서 본다면 관리운영비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관리운영비가 나간다면 기왕이면 더 잘 관리하고 관리거리가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내 다른 공원 대비 인기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환경이나 이렇게 해서 목표 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데를 두고 얘기하는 것과 잘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메마른 서울에 좋은 정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정부와 상관없이 용산공원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과에 급급해서 기본적인 위험성 저감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안고 공원이라는 이름도 못 붙이고 정원이라고 부르면

서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위험성 평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토양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지 않고 정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께 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들이 없으면 시설 유지보수 비용만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라는 것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지금 어쨌든 반환하는 데 속도는 걸리고 어린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안전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지금 문체부 소관에서 256억을 들여서 신규 구조물을 건축하겠다, 전 정부적으로 이런 임시 시설물들을 마구잡이로 짓는 형태가 되니까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회의로 보류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손명수 위원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 하나만……

○소위원장 한준호 예.

○손명수 위원 전세보증금 반환 이것도 지금 전체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 오시라는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차관님, 반환보증 근거가 HUG 내부 규정입니까? HUG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환보증을 임차인들이 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 규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얘기한 것처럼 전세제도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반환보증 제도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임차인이 반환보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 규정을 좀 살펴보고, 저는 이게 매우 잘못됐다고 봐요. 돈을 받은 사람이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대신 내주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반환보증을 들어야지 왜 임차인으로 하여금 반환보증을 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제도가 당장 없어질 수도 없고 반환보증 제도도 당분간은 거기에 따라서 유지가 돼야 된다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증을 드는 주체가 임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최소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보증을 들어 주는 기관도 그 임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해서 보증을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전체회의 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입장으로 이게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면, 지금 현재는 임차인이 들기 때문에 서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임차인 보증료 지원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대인으로 바뀌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을 드는 근거 규정, 왜 임차인이 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을 들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무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임의 가입이거든요.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로 해야 되고 아니면 의무로 하지 않더라도 이걸 임대인으로 해 놔야지,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들 것 아니에요?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집은 임차인들이 선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의무로 하지 않더라도 이게 훨씬 효과가 커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견 하여튼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 오셔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 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시지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제도의 기본은 원래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채무자가 가입을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임대인이 가입을 하도록 하면 가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하고 그 일부를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부대의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부대의견 4번·26번 수정의견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영이라고 하는 업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과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결산 부대의견 사례를 보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 BMW라는 특정 회사명을 본회의에서 결산 부대의견에 명기한 사례가 있고, 지금 많이 찾는 못했지만 말씀드린……

○소위원장 한준호 사례가 없지 않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수정의견은 아마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마지막에 ‘하자보수에 있어서 서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이라는 말이 공문서에 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하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김도읍 위원 예.

○소위원장 한준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18번은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령과 시행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후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하도록 국토부가 이미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부대의견을 담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영 다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위원장님, 팩트 확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관련되어서는 법에는 일단 숙박시설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고시원에만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숙박시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다중생활시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법에 노유자시설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구체화하고요. 의료시설 같은……

○소위원장 한준호 저도 보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다중생활시설로 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이 내역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담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부친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범위를 좀 확대를 하시는데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부대의견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담당하고 있는 건축안전과장 정승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이 19년도에 되고 2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숙박시설 포함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관련보도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을 확대하겠다, 숙박시설이 포함된다, 그게 20년 3월 자 언론에 뜬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니 숙박시설 중에 고시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고요.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이 2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25년까지는 그 전에 지어져서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여기 지원 대상과 지원 기한이 규정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겠느냐를 고민할 때,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해서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까지 총 29종의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호마다 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까를 고민했을 때 지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총 열여섯 가지 종류의 건축물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건축물의 큰 목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으로 넘겨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까지 7종을 규정을 했고요. 시행령에서는 각 종류별로 찾아 들어가서 총 열여섯 가지를 규정했습니다. 그 열여섯 가지 규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호텔부터 해서 일반 영업시설들이 있을 텐데 이 시설들이 사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눈 카테고리는 피난약자 이동시설에 대해서는 열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들은 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열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학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시원 그다음 목욕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층 이상 대형건물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연면적을 1000 이하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2000동의 건물이 대상으로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6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천 화재 이후에 사실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지금 건축법상에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게 한 4만여 동이고요. 이 중에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행 세팅대로 지원을 했을 때 기준 미달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2만 동 이상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00동을 4000만 원 이하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한 동당 1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26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을 기준만 따져 가지고 대상으로 하면 이게 2만 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추정상으로는 26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논의를 할 때 애초에 피난약자 이동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영세한 업체들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숙박시설을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을 때 그 기준으로 좀……

○손명수 위원 이해했어요.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장 정승수 그래서 한번 정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설명 잘하셨고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18번 부대의견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의지를 담아서 ‘국토교통부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내역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고 노후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어차피 다음 달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거거든요.

○소위원장 한준호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 수정한 부분들 반영해서……

위원님들, 잠시만요.

전용기 위원님, 아까 저희 국토교통혁신펀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전용기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거 아직 제출 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1호·2호·3호 펀드 이게 그 앞부분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것은 해외 건설 관련 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한 글로벌인프라펀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용기 위원 1호·2호·5호 펀드가 철회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작성에 한 30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직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제출하고, 그러면 내일모레 의견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것도 잠깐 보류를 해 놓을까요?

○전용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이렇게 해서 4건 정도 보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수정한 사안들 반영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5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보류한 사업들을 제외한 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경미한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13인)

권영세 김도읍 김희정 서범수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오 이연희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정책기획관 박연진

재정담당관 배성호

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차장 조홍남

기획조정관 정인권